
“따뜻한 나라, 역동적 경제, 건전한 재정”

2023년 예산안

2022. 8.

기 획 재 정 부

순 서

I. '23년 예산의 의미와 기초	1
II. '23년 예산안 전체모습	2
III. 재정혁신	8
IV. 중점 투자방향	10
1.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	
2.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	
3. 국민안전 ·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	
[별첨] 분야별 투자방향	48

I. '23년 예산의 의미와 기초

◇ 새정부 편성 첫 번째 예산안 : 국정기조 확실한 구현

① 확장재정 →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면 전환

②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기반, 국정과제·핵심정책과제 적극 이행

1 재정기조를 확장재정 →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

- 그간의 정부주도 확장재정에서 탈피, 민간·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
- '확장재정' → '건전재정'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, 그간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

	'09~'13년	'14~'17년	'18~'22년	'23년案
총지출증가율 평균 (본예산 기준)	5.9%	4.0%	8.7%	5.2%

2 국정과제 확실한 이행,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

- 부모급여, 병 봉급 인상,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
-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,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재원을 집중 배분

3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마련

-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소요 충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
- 개별사업 집행을 점점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 활용, 공공부문 효율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

Ⅱ. '23년 예산안 전체모습

1

재정총량

① '23년 총수입은 **625.9조원** [전년대비 +72.4조원, +13.1%]
[2차 추경대비 +16.8조원, +2.8%]

- 국세수입은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.6% 증가
(‘22년 본예산 343.4조원 → ‘23안 400.5조원)
-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.3% 증가
(‘22년 본예산 210.2조원 → ‘23안 225.5조원)

② '23년 총지출은 **639.0조원** [전년대비 +31.4조원, +5.2%]
[2차 추경대비, △40.5조원, △6.0%]

-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총지출 인상폭 상당부분 흡수하여
예년 대비 대폭 줄어든 5.2% 증가

- ❶ '18~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(8.7%)의 **60%** 수준
- ❷ 지방교부세·금(+22조원) 제외한 중앙정부 **가용재원은 9조원**(+1.5% 수준)

< 2023년 재정운용 모습 >

(단위 : 조원, %)

	'22년		'23안(B)	증감	
	본예산 (A)	추경		(B-A)	%
◇ 총수입	553.6	609.1	625.9	72.4	13.1
· 국세수입	343.4	396.6	400.5	57.1	16.6
· 국세외수입	210.2	212.4	225.5	15.3	7.3
◇ 총지출	607.7	679.5	639.0	31.4	5.2
· 예 산	413.0	449.8	441.3	28.3	6.9
· 기 금	194.6	229.7	197.7	3.1	1.6

③ 재정수지 ·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대비 개선

-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$\Delta 0.6\%$ 로 균형에 가깝게 개선
-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$+1.8\%p$ 개선 ($\Delta 4.4 \rightarrow \Delta 2.6\%$)
-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$\Delta 0.2\%p$ 개선 ($50.0 \rightarrow 49.8\%$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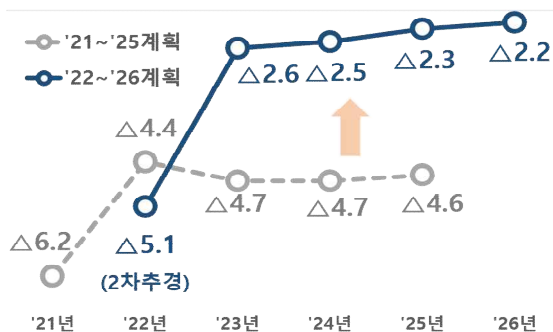
* 국가채무 비율(%) : ('18) 35.9 ('19) 37.6 ('20) 43.6 ('21) 46.9 ('22) 50.0 ('23안) 49.8
(단위 : 조원, %)

	'22		'23안(B)	증감(B-A)
	본예산(A)	2회 추경		
◇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 %)	$\Delta 54.1$ ($\Delta 2.5$)	$\Delta 70.4$ ($\Delta 3.3$)	$\Delta 13.1$ ($\Delta 0.6$)	$+41.0$ ($+1.9\%p$)
◇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 %)	$\Delta 94.1$ ($\Delta 4.4$)	$\Delta 110.8$ ($\Delta 5.1$)	$\Delta 58.2$ ($\Delta 2.6$)	$+35.9$ ($+1.8\%p$)
◇ 국가채무 (GDP대비, %)	1,064.4 (50.0)	1,068.8 (49.7)	1,134.8 (49.8)	$+70.4$ ($\Delta 0.2\%p$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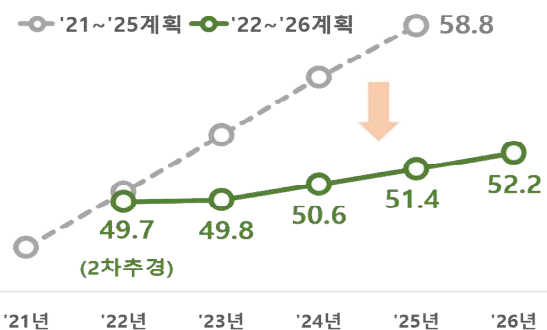
④ 임기 내 '24~'27년 건전재정기조 견지 : 재정수지 $\Delta 3\%$ 이내 관리

- 재정준칙(관리재정수지 $\Delta 3\%$ 이내)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중기 재정총량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
- 총지출증가율은 '23년 5.2%에서 경기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하향, '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
- 관리재정수지(GDP 대비)는 '23~'26년 $\Delta 2\%$ 대 중반 수준, 국가채무(GDP 대비)는 '26년까지 50%대 중반 이내 관리

[관리재정수지: $\Delta 2\%$ 대 중반]



[국가채무: '26년까지 50%대 중반 이내]



◇ 국정과제는 당초 재정투자계획('23~'27년 209조원)상의 첫 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 → '23년 예산안에 총 11조원 수준 편성

□ (당초 재정투자계획 : 인수위)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,
5년간('23~'27년) 209조원(국비기준) 투자 계획

□ ('23년) 예산안 반영 +11조원 수준

① 병 봉급 등을 '22년 82 → '23년 130만원으로 인상(+1.0조원)

* 봉급(병장 기준) + 사회진출지원금 인상 스케줄 :

('22) 68+14 → ('23) 100+30 → ('24) 125+40 → ('25) 150+55만원

② 만 0세 아동 月 70만원 부모급여* 신설(+1.3조원)

* ('22) 영아수당 30 → ('23) 부모급여 도입 70 → ('24) 100만원

③ '청년원가주택' + '역세권첫집' 5.4만호 공급(+1.1조원)

* '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, 역세권 첫집 20만호 총 50만호 공급 계획

④ 청년도약계좌 도입(+0.4조원)

* 가구 중위 180% 이하, 만기 5년, 청년 月 40~70만원 + 정부매칭 최대 6%

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 반영(+0.3조원)

* '22~'25년간 소상공인 부실(우려)채권 최대 30조원 매입·조정을 위한 캠프 출자

⑥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(+0.3조원)

*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(10.7→11.5만명), 저상버스 확대(2.3→4.3천대) 등

□ ('24~'27년) 지속 투자를 통해 임기 내 국정과제 완성

○ '27년까지 부모급여(~'24년 100만원), 병 봉급(~'25년 205만원), 청년주택(~'27년 50만호) 등의 당초 목표 달성 추진

【 주요 국정과제 반영 현황 】

(단위 : 조원)

주요 사업	'23년 예산안	주요 사업	'23년 예산안
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(기준중위소득 5.47% 인상)	+0.7	전국민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	+0.2
의료급여 (재산기준 완화 등)	+1.0	농업직불금 확대 (과거 지급실적 요건 폐지)	+0.3
주거급여 (기준중위소득 46→47%)	+0.4	부모급여 月 100만원 ('23년 月 70만원)	+1.3
국민안심지원제도(긴급복지)	+0.1	무공해차 보급 (23.6→29만대)	+0.3
기초연금 인상 (月 30.8→32.2만원)	+2.4	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	+0.1
장애인 활동지원	+0.2	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	+0.3
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(저상버스 2.3→4.3천대)	+0.1	국방기술 등 핵심기술개발(R&D)	+0.3
청년원가주택 30만호, 역세권 첫 집 20만호 ('23년 5.4만호)	+1.1	병 봉급 200만원 (82→130만원)	+1.0
청년 목돈마련 지원 (청년도약계좌)	+0.4	기타	+α

◇ 총지출증가율은 5.2%이나, 지방교부세·교육교부금*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**가용자원 증가율은 1.5%** 수준에 불과

* 지방교부세·지방교육재정교부금: ('22) 130.1 → ('23) 152.6조원, +22.5조원

◇ **국정과제 및 핵심정책과제(사회적약자, 미래대비) 연관 분야 집중 지원**

분야		주요 증감요인
국방	4.6%	· 병 봉급 인상,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첨단 전력 증강 관련 투자 확대
복지	4.1%	·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,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
환경	3.9%	· 탄소감축 지원 강화, 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
R&D	3.0%	· 7대 핵심 전략기술 및 6대 미래기술 도전 분야 기술 중점 투자
산업· 중소	△18.0%	·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지원 종료 · 반도체,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등 확대
SOC	△10.2%	· 완료소요, 지방이양 등 반영 · SOC 첨단화,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
문화	△6.5%	· 지방이양 소요 등 반영 · 콘텐츠·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확대
지방재정 (교부세·금)	17.3%	·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·금 증가

<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>

(조원)

구 분	'22년 본예산 (A)	'23년 정부안 (B)	증감 (B-A)	%
◆ 총지출 (지방교부세·금 제외)	607.7	639.0	+31.4 (+8.9)	5.2 (1.5)
1. 보건·복지·고용	217.7	226.6	+8.9	4.1
2. 교 육 (교부금 제외)	84.2 (19.1)	96.1 (18.9)	+12.0 (△0.2)	14.2 (△1.3)
3. 문화·체육·관광	9.1	8.5	△0.6	△6.5
4. 환 경	11.9	12.4	+0.5	3.9
5. R&D	29.8	30.7	+0.9	3.0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31.3	25.7	△5.6	△18.0
7. SOC	28.0	25.1	△2.8	△10.2
8. 농림·수산·식품	23.7	24.2	+0.6	2.4
9. 국 방	54.6	57.1	+2.5	4.6
10. 외교·통일	6.0	6.4	+0.4	7.3
11. 공공질서·안전	22.3	22.9	+0.5	2.4
12. 일반·지방행정 (교부세 제외)	98.1 (33.0)	111.7 (36.4)	+13.6 (+3.4)	13.9 (10.3)

Ⅲ. 재정혁신

1

지출 재구조화

□ **(총량)** 재량지출 중심 통상(10조원 내외)의 2배, 역대 최대인 △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실시

○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국민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 마련

□ **(방향)** 새 국정운영 방향 반영,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 추진

○ 집행점검·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,
민간역량 활용 + 공공부문 효율화 방향 아래 **전략적 접근**

유형	주요 사례
정부-민간 역할 재정립	① 재정지원 일자리·창업사업 민간중심 전환 - (노인일자리) 단순노무 공공형 축소, 사회서비스·민간형 확대 - (창업지원) 정부·공공 직접 선정에서 민간·대학 참여 연계 확대
	② 정책금융 직접용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- 민간 조달 가능 高신용층 직접용자는 이차보전 전환
	③ 산업·디지털 인프라, 민간시장 구축 방지 위해 선택과 집중 -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, 스마트공장 구축 민간주도로 전환
재정 투자 효율화	④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 통한 지원 적정화 -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 적정화
	⑤ 여건변화 반영 등 투자중점 전환 및 우선순위 조정 -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
	⑥ 사업목적 달성 제고 위한 추진체계·지원방식 개편 -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중복인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
한시지출 정상화	⑦ 코로나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상화
공공부문 출선수범	⑧ 저성과 위원회 조직 정비 및 공공부문 고통분담 강화 - 재정수반 위원회(246개) 통폐합(통합 48개, 폐지 33개) - 장차관급 이상 10% 반납, 4급 이상 동결, 5급 이하 1.7% 인상

2

재정총량 관리 강화

- 단순하고 엄격한 **재정준칙 도입**으로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
 - (준칙한도) 관리재정수지 $\Delta 3\%$ 이하(채무비율 60% 초과시 한도 축소)
 - (도입형태) 법률에 준칙한도 명시 → 높은 수준의 구속력 확보
 - (예외규정)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준칙 면제 가능
 - * 단, 위기 종료시에는 바로 준칙기준으로 복귀 +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
- ※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

3

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

- (**민간투자**) 대상시설 다양화¹⁾, 참여유인 제고²⁾, 민자 관리 체계 혁신³⁾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(연평균 5→7조원+a)
 - 1) 도로·철도 중심 → 교통·생활인프라 확충, 노후시설 개량 등
 - 2) 사업방식 다변화, 수익 패러다임 전환, 절차·비용부담 완화 등
 - 3) 재정·민자사업간 연계 강화, 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,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
- (**사업구조 개편**)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을 감안 하여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
 -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「(가칭)고등·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」 신설,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
 - * 특별회계 편성안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률 제·개정과 함께 통과 추진
- (**성과평가**) 성과평가 비효율 제거¹⁾, 평가결과의 환류 제도화²⁾, 성과정보의 대국민 공개³⁾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효과성 제고
 - 1) 6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11개 성과평가의 평가항목·시기 표준화
 - 2)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 구조조정 원칙 도입
 - 3)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대국민 공개
- (**예타 관리**) 불명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·객관화*하고,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면제 최소화
 - * (예) (現) 기존시설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·유지보수 사업 →
 - (改) 일부시설 신설이 포함되거나 기존시설대비 증설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

IV. 중점 투자방향

목표

역동적 경제 및 행복사회 구현

기본
방향

재정기조를 확장기조→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 전환
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기반,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뒷받침

투자
중점

모두가 함께
행복한 사회 구현

- ❶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
- ❷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
- ❸ 생활물가 안정 지원
- ❹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
- ❺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
- ❻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

민간 주도
역동적 경제
뒷받침

- ❶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
- ❷ R&D 고도화
- ❸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
- ❹ 산업·기업 역동성 제고
- ❺ 중소벤처,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국민안전·
글로벌 중추국가
역할 강화

- ❶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
- ❷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
- ❸ 일류 보훈체계 구축
- ❹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
- ❺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

재정
혁신

재정지출 재구조화

재정총량 관리강화

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

【 '23년 예산안 12대 핵심과제 (총 135조원) 】

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	31.6조원
* 소득(18.7조원) + 일자리(1.2조원) + 주거(11.8조원)	
②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	26.6조원
* 장애인(5.8조원) + 노인(20.1조원) + 아동·청소년(0.2조원) + 한부모 등(0.5조원)	
③ 생활물가 안정 지원	5.5조원
* 수급 안정(3.9조원) + 생계비 경감(1.1조원) + 식량안보(0.6조원)	
④ 청년 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 등 종합 지원	24.1조원
* 자산형성(2.5조원) + 주거(6.8조원) + 일자리(4.3조원) + 사회·복지(10.4조원)	
⑤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	8.0조원
* 농산어촌 지원(5.4조원) + 지역거점 지원(0.6조원) + 지방재정 지원(2.0조원)	
⑥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원 투자	1.0조원
* 인력양성(0.4조원) + R&D(0.4조원) + 인프라 등(0.2조원)	
⑦ 7+6*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	6.0조원
* 7대 전략(4.5조원) + 6대 미개척(0.4조원) + 민간역량 활용(1.1조원)	
※ 과제분류는 추후 정책 보완시 변경 가능	
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	3.1조원
* 해외자원개발(0.2조원) + 국산화 R&D(2.2조원) + 공공비축 등(0.6조원)	
⑨ 중소벤처기업,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	4.6조원
* 중소기업(2.4조원) + 벤처·창업(0.6조원) + 소상공인(1.0조원)	
⑩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	13.1조원
* 병 봉급 및 급식·주거여건 개선(6.9조원) + 보훈(6.2조원)	
⑪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	4.5조원
* 국내기업 해외진출(1.5조원) + 개도국 협력(2.0조원) + 국제기구 협력(1.0조원)	
⑫ 재난·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	7.2조원
* 수해 등 재난대응(5.8조원) + 현장대원 장비(0.3조원) + 생활안전(1.1조원)	

◇ '23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22년	'23년
사회안전망	생계급여 최대급여액(4인)	월 154만원	월 162만원
	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(기본공제, 서울)	생계 69백만원 의료 54백만원	생계 99백만원 의료 99백만원
	전세피해 긴급 용자	-	1,660억원
	취약거주자 주거상향 지원	-	이사비 4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용자
사회적약자 보호	장애수당	월 4만원	월 6만원
	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	월 125시간	월 154시간
	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	월 30만원	월 40만원
생활물가 안정	농축수산물 할인지원	590억원	1,690억원
	에너지바우처	12.7만원	18.5만원
	밀 비축	1.4만톤	2.0만톤
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	K-HighTech Training	2.8만명	3.6만명
	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	11.6만원/월	20만원/월
	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	-	7천개소
지역 균형발전	소규모 어가·어선원 직불금	-	4.7만명/120만원
	어촌신활력증진	-	60개소
저출산 대응	부모급여 도입	월 30만원 (영아수당)	월 70만원
	야간연장 보육료	3,200원/h	4,000원/h
	아이돌봄 지원	7.5만 가구	8.5만 가구

1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

[27.4→31.6조원]

- ◇ 기준중위소득 5.47%(4인) 인상, '15년 제도 도입후 최대 폭
- ◇ 특고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완화(+28만명)
- ◇ 취약지 거주자,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신설

【 소득 】

[16.4→18.7조원]

- (기초생활보장)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,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보호체계 구축

-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(+5.47%, 4인)으로 생계급여액 月 154→162만원(4인)으로 상향,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+23.3% 인상

* 1인 가구(생계급여 수급자의 80%)는 가중치 상향으로 전년대비 6.84% 인상

- (생계급여)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최대급여액(중위 30%) 月 154→162만원(4인) 상향
- (교육급여)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33.1→41.5만원, 중등 46.6→58.9만원, 고등 55.4→65.4만원 상향

- 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^{신규}(+4.8만가구)*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(+3.4만가구)를 통해 기초생보 사각지대 보완

* 생계급여는 '20년 이후 3년만에, 의료급여는 '09년 이후 14년만에 재산기준 완화

- (생계·의료) (생계)기본공제 69→99백만원, 주거재산한도 120→172백만원으로 완화(서울기준), (의료)기본공제 54→99백만원, 주거재산한도 100→172백만원으로 완화(서울기준)
- (주거급여)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6→47% 이하 가구로 확대해 3.4만 가구 추가 지원

- (의료비 지원)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

- (재난적의료비) (의료비기준)연소득 15→10% 초과, (재산기준)5.4→7억원, (한도)年 3→5천만원
- (상병수당)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의 2단계 시범사업 3개소 확대(6→9개소)

- (긴급복지) 실직·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月 154→162만원(4인가구)으로 인상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

【 고용 】

(1.1→1.2조원)

- (사회보험) 저임금 근로자, 특고·예술인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(+27.8만명)
 - (사업장기준) 예술인·특고의 경우, 10인 미만 사업장→全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(+10.3만명)
 - (소득기준)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→130%으로 확대(+17.5만명)
 - (국민취업지원제도) 구직촉진수당(月 50만원)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(月 50→60~90만원)하여 생계지원 강화
 -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*하여 참여자의 조기취업 유도
- * (현행) 50만원 → (개편) 취업시기에 따라 50~125만원 지급

【 주거 】

(9.9→11.8조원)

- (주거상향) 반지하·쪽방*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·보증금** 지원^{신규}(1.5만가구, 0.3조원)
 - * 반지하, 쪽방, 비닐하우스, 고시원, 노숙인 시설 등
 - ** 이사비·생필품 지원 40만원, 이주보증금 무이자 용자 최대 5,000만원
- (전세사기 예방)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사전^{사전} 보증 가입비용 지원(20만명)과 사후^{사후} 긴급대출 지원^{신규}(0.2조원)
 - * (사전)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(평균 年 6.1만원),
 - (사후)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처리용자 지원(1.6억원 한도, 0.2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소득안전망	16.4조원	18.7조원	
- 생계급여	52,648	60,141	기준중위소득 인상(+5.47%) 및 재산기준 완화
- 의료급여	81,232	90,984	재산기준 완화, 수급인원 확대 등
- 재난적의료비지원	400	568	지원요건 완화, 지원한도 상향
○ 고용안전망	1.1조원	1.2조원	
-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	10,466	10,764	소득기준 및 예술인·특고 사업장기준 완화
○ 주거안전망	9.9조원	11.8조원	
- 구입·전세자금용자	95,300	106,360	고금리 상황에서 주거금융 지원 +1.1조원 확대
- 비정상거처 임대 보증금 무이자용자	-	2,550	공공임대 이주 1만명 × 50만원 한도 민간임대 이주 5천명 × 5천만원 한도
- 전세피해 긴급용자	-	1,660	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피해시 최대 80% 용자

2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

[23.2→26.6조원]

- ◇ (장애인) **장애수당** '15년 이후 **최초 인상**(月 4→6만원), **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보장**
- ◇ (자립준비청년) **자립수당 인상**(月 30→40만원), **의료비**(연평균 15만원) **신규 지원**
- ◇ (한부모) **양육비 지원대상 대폭 확대**(중위 52→60% 이하)

【 장애인 】

[5.1→5.8조원]

- **(돌봄)** 발달장애인 낮 8시간을 온전히 보장(月 125→154시간, 1만명)하고 **긴급돌봄 제공** **신규**(40개소), **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강화**

- (발달장애인)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개편·시간 확대(최대 日 8시간/月 22일 지원), 보호자 우울증, 사망 등 **긴급상황** 시에 **긴급돌봄 제공**(40개소, 최대 7일) **신규**
- (최중증장애인)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**가산급여 대폭 확대**(4→6천명, 月 30→45만원)
- (장애아동)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月 70→80시간, 발달재활 지원단가 月 22→25만원 인상

- **(소득·고용)** 장애수당(月 4→6만원)·장애인연금(月 30.8→32.2만원)을 인상하고,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**고용장려금, 출퇴근비 지원 확대**

- (장애수당) '15년 이후 동결된 기초·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**장애수당**(月 4→6만원) 인상
- (장애인연금)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**장애인연금액**(月 30.8→32.2만원) 인상
- (고용장려금)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**고용장려금** 단가 인상(月 30~80→35~90만원)
- (출퇴근비용) **기존**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→ **추가**중위 50% 이하 중증장애인(月 5만원) (0.3→1.5만명)

- **(생활)** 이동편의·교육권 보장을 위해 **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** **신규**하고, 평생학습도시 확대(15→53개소)

- (이동편의) 장애인콜택시 **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** **신규**, 저상버스 2.3→4.3천대 확충
- (교육·문화) 평생학습도시 15→53개소,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10→14천명 확대
- (자립지원) 시범사업 대상자 200→400명,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 확대(月 60→80시간)

- **(의료)** 장애 조기발견·개입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**인프라 확충**

- (발달장애인)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(건보 하위 70→80%), 거점병원 10→12개소
- (의료인프라)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 **구축** **신규**, 권역구강진료센터 15→16개소 확대

【 노인 】

[17.4→20.1조원]

- **(소득·고용)** 기초연금(月 30.8→32.2만원) 인상, 양질의 민간·사회 서비스형 일자리(23.7→27.5만개) 확대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

- (소득) 기초연금 지원대상(628→665만명) 확대, 지원금액(月 30.8→32.2만원) 인상
- (고용) 민간(16.7→19.0만명)·사회서비스형(7.0→8.5만명) 일자리, 고용장려금(0.9→6.1만명) 확대

- **(돌봄)**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돌봄서비스 확대(50→55만명) 및 시설이용자 안전 등을 위한 요양시설 CCTV 설치 **신규**(6천개소)

- (돌봄) 노인맞춤돌봄서비스(50→55만명), 응급안전안심서비스(20→30만대) 지원대상 확대
- (의료) 요양시설 CCTV 설치 **신규**(6천개소), 요양시설 확충(치매전담 신축 8개소, 증·개축 6개소)

【 아동 · 청소년 】

[0.16→0.21조원]

- **(자립준비청년)**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月 30→40만원으로 인상하고,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**신규**

- (자립지원수당) 지원단가를 月 30→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(1.0→1.2만명)
- (의료비)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**신규**(8,000명, 연평균 15만원)
- (정서지원) 고립·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, **신규** 자조모임 활성화 **신규** 등

- **(학대피해아동)** 피해아동 보호·치유·회복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

- (보호·치유) 학대피해아동쉼터(141→177개소), 전담의료기관(8→17개소) 확대
- (회복지원)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확대(1,000→1,200가정)

- **(학교밖청소년)** 소득·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(0.2만명)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月 최대 55→65만원으로 인상

- **(희귀질환아동)**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→130%로 확대(0.4→0.6만명)

【 한부모 · 다문화 】

[0.43→0.50조원]

- **(한부모가정)** 한부모·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3.8만명(22.1→25.9만명)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

- (한부모) 지원기준 중위소득 52→60% 상향(月 20만원)
- (청소년한부모) 지원기준 중위소득 60→65% 상향(月 35만원)

- **(다문화가정)**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·진로상담(78→113개소) 및 학습지원(90→138개소)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확대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장애인	5.1조원	5.8조원	
- 장애수당	1,424	2,150	장애수당 +2만원 인상(月 4→6만원)
- 발달장애인지원	2,080	2,528	주간활동서비스 日 8시간 보장(月 125→154시간)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(40개소)
- 장애인활동지원 (가산수당)	90	219	최중증장애인 돌봄 인센티브 확대 (4→6천명, 月 30→45만원)
- 장애아동가족지원	1,492	1,757	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(6.9→7.9만명), 지원단가(月 22→25만원) 인상
-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	1,091	2,245	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신설 저상버스 확충(2.3→4.3천대)
○ 노인	17.4조원	20.1조원	
- 기초연금	161,140	185,304	지원단가 인상(月 30.8→32.2만원)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	4,366	5,020	대상자 +5만명 확대(50→55만명)
○ 아동·청소년	0.16조원	0.21조원	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	275	437	자립수당 월 30→40만원, 지급인원 1.0→1.2만명
-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체계 구축	77	129	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규 지원 (연 8,000명, 1인당 약 15만원) 등
-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	397	471	학대피해아동 쉼터 141→177개소, 요보호아동 그룹홈 517→527개소
-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	381	413	아동보호전문기관 95→105개소, 방문형 가정회복 1,000→1,200가정
- 희귀질환자 지원	367	394	만 18세 미만 지원기준 상향(중위 120→130%)
○ 한부모 · 다문화	0.43조원	0.50조원	
-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	4,213	4,959	선정기준 상향(중위 52→60%)
-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	37	57	심리상담 및 직업컨설팅(78→113개소), 취학전후 학습지원(90→138개소)

[청년 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 맞춤형 지원 (23.4→24.1조원)]

□ [자산형성]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(2.0→2.5조원)

- (일반청년)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'청년도약계좌'^{신규} 도입(306만명)
 - * 가구 중위 180% 이하, 만기 5년, 청년 月 40~70만원 + 정부매칭 최대 6%
- 저소득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 확대(10.4→17.1만명)
 - * 가구 중위 100% 이하, 만기 3년, 청년 月 10만원 + 정부매칭 최대 30만원
- (장병)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비율을 상향하여
전역시 최대 1,290만원(본인 750만원 + 정부 250→540만원) 수령

□ [주거]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등 주거사다리 강화 (6.3→6.8조원)

- (내 집 마련)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*
청년주택^{신규}(청년월가 + 역세권 첫집) 5.4만호 공공 직접공급 착수
 - * 시세 70% 이하 공급 + 매각 차익 70% 귀속 → 내집마련 + 자산형성 뒷받침
- (전세 보호)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^{신규} 지원(20만 가구)

□ [일자리] 첨단분야 직업훈련,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(5.4→4.3조원)

- * 청년대상 고용장려금('22년부터 신규지원 중단) 등 한시사업 제외시 3.8→ 4.0조원
- (직업훈련)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
훈련과정(K-HighTech Training) 확대(2.8→3.6만명)
- (고용서비스) NEET·대학생 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(1.0→5.5만명)
 - * 구직단념청년(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참여시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원, 0.5만명)^{신규},
대학생(도약보장패키지 3만명)^{신규}, 구직청년(일경험 1→2.0만명)
- (장려금) 취약청년의 고용촉진과 장기채용 유도를 위한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(1년간 총 960 → 2년간 총1,200만원)

□ [사회·복지] 병봉급 인상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(9.7→10.4조원)

- (병역 복무여건) 병 봉급(병장기준 67.6→100만원) 및 급식단가
(日 1.1→1.3만원) 인상 등을 통해 희생에 대한 예우 강화
- (자립준비 청년) 자립수당 단가·대상 확대(월 30→40만원,
1.0→1.2만명), 사례관리 대상 확대(1,470→2,000명) 등 지원 강화

3 생활물가 안정 지원

[4.7→5.5조원]

- ◇ **핵심품목 비축 확대, 유통망 스마트화** 등 주요품목 수급안정 유도
- ◇ **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, 에너지바우처** 단가 **50% 수준 인상**
- ◇ **전략작물직불제 도입, 국제곡물 유통망 투자 지원** 등 식량안보 강화

【 주요품목 수급 · 가격안정 】

[3.5→3.9조원]

- **(수급관리)**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
 - 밀(1.4→2.0만톤), 대중성 수산물(1.3→3.2만톤) 등 주요품목 비축 확대
 - 가격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(생산량의 20→23%, +100억원)
- **(유통구조)** 유통망 온라인 · 스마트화로 비용 상승압력 완화
 - 유통정보 전산화, 선별 · 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(APC) 설치 지원 확대(10→15개소, +110억원)
 - 저온·친환경 위판장 도입(5개소),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(+49억원) ^{신규} 등 유통 · 거래과정 디지털 전환
- **(생산부담 경감)** 농어가 비료·사료 구매자금(+1,144억원) 및 계란공판장 운송비 지원(+56억원)으로 생산비용 절감 지원

【 필수 생계비 경감 】

[0.8→1.1조원]

- **(농축수산물)**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(1인당 1만원, 최대 20%) 규모를 **2배 이상 확대**(590→1,690억원)
- **(에너지)** 저소득층 등 대상*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**40% 이상 대폭 인상**(연간 12.7→18.5만원)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·장애인·영유아·임산부·난치성질환자·한부모가족·소년소녀 가정이 있는 약 85.7만 가구 대상

- **(생필품)** 차상위 이하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)가구 및 한부모가족 대상 기저귀·분유·생리대 바우처 단가 인상(+122억원)
* (기저귀) 6.4→8.0만원/月, (조제분유) 8.6→10.0만원/月, (생리대) 1.2→1.3만원/月
- **(교통)**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* 대상 인원 확대(44→64만명, +124억원)
*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한 할인 혜택 제공
- **(여가·교육)** 차상위 이하의 도서구입비·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 인상*(+555억원)
* (통합문화이용권) 10→11만원/年 (스포츠강좌이용권) 8.5→9.5만원/月

【 식량안보 강화 】

[0.4→0.6조원]

- **(국내생산)** 가루쌀 산업화 지원^{신규}, 밀·콩 생산단지 지원 확대, 전략작물직불제 도입(밀-콩 이모작:250만원/ha) 등 핵심작물 생산 촉진
* 식품업체가루쌀 제품개발 지원(15개), 밀·콩 생산단지 시설·장비 지원(44→50개소)
- **(수입선 다변화)**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인수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(500억원 한도) 이차보전 지원(13억원^{신규})
- 국내 농업기업의 해외진출*(현지 생산) 지원 확대(12→15개)
*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, 현지 생산 환경 등 정보제공 지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수급관리 안정적 지원	34,773	38,706	
- 농수산물 비축지원	2,712	4,068	밀(1.4→2.0만톤), 대중성 어종(1.3→3.2만톤)
- 농산물생산유통조절	456	556	채소가격안정제 확대(20→23%, +100억원)
- 온라인거래활성화	12	49	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
○필수 생계비 경감	7,845	10,683	
- 농축수산물 할인쿠폰	590	1,690	농축수산물 할인 품목 및 기간 확대
- 에너지바우처	1,389	1,824	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(12.7→18.5만원)
○식량안보 강화	4,357	6,108	
- 전략작물직불	20	278	밀-콩 이모작: 250만원/ha, 콩·가루쌀: 100만원/ha
- 농업자금이차보전 (국제곡물망 확보)	-	13	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투자비용 이차보전
- 가루쌀 산업화 지원	-	107	가루쌀 생산단지 시설·장비 지원(25개소)

4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

[11.0→12.1조원]

- ◇ 일자리 예산은 **정부 직접지원**(직접일자리, 고용장려금) 등은 **축소**,
민간일자리 연계(직업훈련, 고용서비스) 지원은 **강화**하는 방향으로 내실화

【 직업훈련 · 고용서비스 】

[3.0→3.3조원]

- **(직업훈련)** 시장 수요(첨단산업·국가기간전략산업), 개인·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(2.3→2.6조원)
 - 첨단산업대기업이 설계·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(K-HighTech Training) 확대,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 강화
 - **(K-HighTech)** 디지털 → 바이오·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(2.8→3.6만명, +915억원)
 - **(대학 활용)**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구축 **신규**(10개소, 112억원)
폴리텍 첨단산업학과(반도체, AI 등) 신설·개편(25개, +350억원)
 - 국가기간산업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(일반직종 +5%, 인력부족직종 +10%)·
훈련장려금(월 11.6→20만원) 인상으로 훈련 성과 제고
 - 맞춤형훈련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(기업직업훈련카드),
플랫폼종사자,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훈련 신규 지원
 - **(기업)** 기업직업훈련카드 **신규**(1.5만개, 357억원), 능력개발주치의 **신규**(15개 센터, 71억원)
 - **(개인)**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**신규**(20만명, 200억원), 중장년 새출발 훈련(0.5→1.0만명, +50억원)
- **(고용서비스)** 고용복지+센터 중심 특화센터(새일센터 등) 통합·연계,
기업·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도입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(+375억원)
 - **(전달체계)** 고용복지+센터 중심 새일센터 등 특화센터 통합·연계 **신규**(4개소, 180억원)
 - **(기업도약패키지)**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(조선업 등) + 맞춤형 채용서비스(+24억원)
 - **(구직자도약패키지)** 역량진단·경력설계·일자리추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(+63억원)

- **(지역고용)** 지역의 고용상황·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확대(+356억원)

* 지자체별 평균 지원규모를 17→38억원으로 2배 이상 상향

- **(산업안전)**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업종을 확대하고, 중대 재해처벌법* 안착을 위한 영세·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

* 중처법 적용대상이 '24.1월부터 50인 이상 →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

- (산재보험) 특고 적용범위 확대(23.7월 1개 사업장 전속성 요건 폐지(+71.6만명))
- (작업장 환경개선) 노후·위험공정 교체(1.5→2.2천개소), 유해물질 환기장치 설치^{신규}(373개소)
- (안전관리체계 구축) 안전전문가 컨설팅(0.2→1.6만개소), 안전보건 교육(42.5만명→56.1만명)

- 근로 환경이 취약한 6개 업종(청소·경비 등)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지원(0.7만개소, +224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직업훈련 · 고용서비스	30,114	33,297	
- 내일배움카드	12,246	14,151	국기훈련 훈련단가·훈련장려금 인상(+1,142억) K-HighTech Training확대(+914억)
- 사업주직업훈련	2,744	3,080	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(1.5만개 기업)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	1,319	1,445	첨단산업특화 공동훈련센터(15→20개)
- 직업안정기관운영	438	702	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(4개소), 업종별 취업지원센터(반도체, 조선) 구축
○ 지역고용 · 산업안전	79,848	87,878	
- 산재보험급여	71,463	77,923	특고 적용대상 확대(+71.6만명)
- 클린사업장조성지원	4,509	5,070	노후·위험공정 교체지원, 환기장치 설치
- 업종별재해예방	914	1,315	안전전문가 컨설팅(0.2→1.6만개) 등
- 일터혁신 지원	257	280	임금체계 개편,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등
-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	1,327	1,475	지역혁신프로젝트 294→650억원

5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

[6.0→8.0조원]

- ◇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(+56만가구),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(4.7만가구)
- ◇ 지방재정 +1.2조원 순증(지방소비세 +1조원, 특별양여금 +0.2조원)

【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】

[4.8→5.4조원]

- (농어가 소득안정) 농업직불금 제도개편*을 통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(+56만명, +0.3조원)
 - * 과거('17~'19년 요건)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 삭제
-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·어선원에 대한 직불금(120만원/년) 신설 ^{신규} (4.7만가구, 512억원)
- (정주여건 개선) 민자유치를 병행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신규 착수 ^{신규} (60개소, 444억원)하고, 농촌공간정비 확대(45→85개, +415억원)
 - * '23~'27년간 총 300개소에 총 2조원(국비 기준) 지원 계획
- (농어업 경쟁력 강화)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(2,000→4,000명) 및 스마트팜·주택·농지 패키지* 지원(+0.1조원)
 - (농지) 先임대-後매도 방식 농지 장기임대(81억원 ^{신규}), 농업스타트업단지 공급(6ha ^{신규})
 - (팜·주택) 비축농지활용 스마트팜 조성(6ha ^{신규}), 스마트팜 인근 임대주택단지 조성(4개소)
-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(10→13개), 농업용 로봇 실증(과수·논·밭 3종),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(1개소 ^{신규}) 등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(+0.1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- 공익기능증진직불	23,610	26,868	기본직불 사각지대 해소(56만 농업인농가, +0.3조원), 전략작물직불 개편(밀-콩 이모작:250만원/ha 등)
- 수산공익직불제	559	933	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(120만원 4.7만명)
- 어촌신활력증진	-	444	신규 지자체 60개소 선정 지원
-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	389	551	지원인원(2,000→4,000명), 지원금(월100→110만원)
-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	48	63	농업용 로봇 3종(과수, 논, 밭) 실증

【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】

[1.2→2.6조원]

- **(지방재정 보강)** 「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」 확대(0.8→1.0조원), 지방소비세 증가(+1조원^{수준}, 2단계 재정분권) 등 지방재원 1.2조원 순증
- **(지역 성장거점)** 행정기관 이전 및 산업·문화·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 조성·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(+0.2조원)

- (행정)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(설계비 1억원^{신규}), 혁신도시 재구조화(+9억원) 등
- (산업) 디지털 혁신거점(2개소, 44억원^{신규}), 연구산업진흥단지(2개소, 50억원^{신규}),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(5개 권역, 77억원^{신규}) 등
- (문화) 관광거점도시(+92억원), 문화도시(+90억원) 육성 등
- (교육)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(6→8개 지역), 캠퍼스혁신파크(7→9개교) 등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-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	7,500	10,000	인구감소지역(89개) 등 연간 1조원 지원
- 대통령 제2집무실	-	1	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 반영
- 행정기관 추가 이전	9	240	기상청 등 기관 지방이전 추진
- 세종스마트시티	195	205	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(5생활권)
- 혁신도시 재구조화	49	58	공유오피스(3→5개소), 혁신융합캠퍼스(3→6개소) 등
- 연구개발·디지털 거점	-	171	디지털 혁신거점, 연구산업진흥단지(각 2개지역), 지역 메가프로젝트(5개 권역, 신규)
- 문화·관광거점 조성	1,117	1,309	관광거점도시(5개소), 문화도시(18→ 24개소) 등
- 지역대학 교육허브	2,650	3,176	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(+600억원) 등

※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할 강화

- 지역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 등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 규모 대폭 확대*(10.9→ 12.7조원, +1.8조원)
 - * 지식산업센터(618→ 1,394억원), 스마트빌리지 보급·확산(100→ 632억원),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(397→670억원), 슬레이트관리(763→ 849억원) 등
- 시·도 자율사업 유형 확대(13→ 24개), 인구감소지역 보조율 상향(+5%p, 포괄보조사업) 등 지역 자율성 제고, 낙후지역 지원 강화

6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

[6.0→7.4조원]

- ◇ 月 70만원의 **부모급여 신규 도입**(0세 아동, '24년 100만원)
- ◇ 돌봄·고용유지·건강관리 등 **수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 확대**

○ **(양육부담 완화)** 만 0~1세 아동 양육가구에 月 35~70만원을 지급하는 **부모급여**(~'24년 50~100만원) **도입** **신규**(+1.3조원)

* (만 0세) '22년 월 30(영아수당) → '23년 70(부모급여 도입) → '24년 100만원
(만 1세) '22년 월 30(영아수당) → '23년 35(부모급여 도입) → '24년 50만원

- 저소득층·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
확대로 출산·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

- (저소득층) 기저귀(月 6.4→8만원), 분유(月 8.6→10만원) 바우처 지원수준 상향
- (한부모) 양육비 지원을 중위 52→60%으로 확대(月 20만원, 22.1→25.9만원)
- (청소년한부모) 양육비 지원을 중위 60→65%으로 확대(月 35만원, 0.3만명 수준)

○ **(돌봄공백 해소)** 연장보육·아이돌봄 대폭 확대를 통한 맞벌이가구 양육부담 경감 및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신설(0.45→0.57조원)

- (연장보육)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**연장보육료 지원 확대**(42→48만명)
- (야간연장보육) 실질적인 야간연장반 개설·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(3.2→4.0천원/h) · 교사인건비(月 149→179만원) 대폭 상향
- (아이돌봄 지원) 맞벌이가구 지원대상(7.5→8.5만가구) 및 지원시간(年 840→960시간) 확대
- (생활서비스) **중장년 1인가구, 한부모가구,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, 병원동행,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** **신규**(月 평균 20만원, 3.2만가구)

○ **(일·가정 균형)** 육아휴직, 육아기·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·사업주 지원 확대로 일하는 부모의 부담 완화(1.9→2.1조원)

- (근로자) 육아휴직 지원(12.8→13.2만명)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(0.9→1.9만명)
- (사업주) 육아휴직·육아기(2.2→2.7만) 및 가족돌봄(1.3→1.6만)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

○ **(모자 건강관리)** 출산 후 산모·영아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등 대상 정서적 지지 서비스 확대(88→97억원)

- (생애초기 건강관리)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가정 직접방문(보건소 50→75개소)
- (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)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 설치 확대(5→7개소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양육부담 완화	3.6조원	4.7조원	
- 부모급여	3,731	16,249	('23) 만 0세 70만원, 만 1세 35만원 지급 ('24) 만 0세 100만원, 만 1세 50만원 지급
- 아동수당	24,039	22,564	만 0~7세 아동에게 月 10만원 지급
- 첫만남이용권	3,731	3,194	출생 직후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 지급
-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	270	382	기저귀 月 6.4→8.0, 조제분유 8.6→10.0만원, 지원대상 연간 8.3→9.5만명
-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	4,213	4,959	소득기준 상향(52→60%)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22.1→25.9만명
○ 돌봄공백 해소	0.45조원	0.57조원	
- 연장보육료 지원	692	775	퇴근 등으로 17:00~19:30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보육료 지원 42→48만명
- 야간·휴일보육료 지원	249	283	야간연장 보육료 3.2→4.0천원/h
- 야간·휴일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	598	648	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月 149.2→178.6만원
- 아이돌봄 지원	2,778	3,546	지원대상 가구 7.5→8.5만 확대 지원시간 年한도 840→960시간
- 시간제 보육 지원	209	204	통합반 신규운영으로 지원인원 830→1,030명
-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	-	212	한부모청년가장중장년 1인가구 대상 가사지원·자녀돌봄 등 생활서비스 제공(3.2만가구)
○ 일·가정 균형	1.9조원	2.1조원	
- 육아휴직 정착 및 고용안정 지원	17,276	18,515	육아휴직(일반) 지원인원 12.8→13.2만명 3+3 부부공동육아휴직 지원 0.6→1.4만명 육아휴직 장려금(사업주) 지원 1.9→2.0만명
- 근로시간 단축 및 워킹맘 보육 지원	1,932	2,359	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1.3→1.6만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0.9→1.9만명
- 일생활 균형 인프라·문화 확산	830	830	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CEO 및 근로자 대표 일생활 균형 교육
○ 모자 건강관리	0.01조원	0.01조원	
- 청소년 산모지원	5	5	만 19세 이하 산모 대상으로 임신·출산·의료비 바우처 120만원 추가지원
- 생애초기 건강관리	41	51	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만 2세 영아 가정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(보건소 50→75개소)
-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설치·운영	12	14	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 부부 정신건강 지원 권역 난임상담센터 확대(5→7개소)

◇ '23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22년	'23년
미래전략 산업	반도체 인력양성	1.5만명	2.6만명
	원전기업 지원	사업전환(76社)	역량강화(116社)
	원전 R&D 과제수	83개	157개
R&D 고도화	초격차 전략기술 투자 확대	3.7조 원	4.5조 원
	미개척 도전분야 투자	0.3조 원	0.4조 원
	민간역량 활용 R&D 확대	0.8조 원	1.1조 원
디지털혁신 탄소중립	입체주소체계 구축	2차원 평면	3차원 입체
	녹색금융 공급	3.8조 원	9.4조 원
	탄소중립형 산단	10개소	15개소
기업·산업 역동성 제고	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거점	10개소	15개소
	수출기업 해외공동물류센터	1,286개소	1,526개소
	석유 비축량	25만배럴	36만배럴
중소벤처, 소상공인 경쟁력강화	TIPS 연계지원 기업 수	1.1천개사	1.6천개사
	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	6만명	7만명
	온누리상품권 발행액	3.5조 원	4조 원

1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

[2.8→3.7조원]

- ◇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을 위해 총 1조원 집중 투자
- ◇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인력·R&D·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(+0.1조원)
- ◇ 양자·우주 등 유망분야 혁신인재 20.3만명 양성(+4.1만명)

○ (반도체) 美·中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원 투자

- 반도체 인력 양성을 특성화학과 확대,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1.5→2.6만명으로 확대(0.18→0.45조원)

- (학과개편) 폴리텍 반도체학과(10개, 350억원^{신규}), 반도체특성화대학(원)(9개교, 570억원^{신규})
- (기자재·시설) 국립대실습기자재 (46→560억원), 반도체공동연구소(60억원^{신규}) 등

- 차세대 반도체(AI, 지능형반도체(PIM), 전력 등),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&D 지원 확대(0.34→0.39조원)

- (차세대반도체) PIM인공지능반도체 (506→579억원), K-Sensor(129→254억원) 등
- (패키징) 전략제품창출 글로벌K-패키징육성 (73→215억원)

- 패키징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 개발·IP·설계 등 사업화 지원(0.13→0.17조원)

- (인프라) 나노패키징 (526→618억원), 반도체설계 검증인프라(^{신규}140억원) 등
- (사업화) AI반도체실증 (41→125억원), 시스템반도체IPBank (33→54억원) 등

○ (원자력) ①원전기업 역량강화, ②맞춤형 수출지원 및 ③기술개발·④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(0.54→0.67조원)

- 핵심기술·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,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 확대(269→483억원)

- (원전기업 지원) 사업전환 지원(76社, 30억원) → 역량강화 지원(116社, 36억원)
* (사업화) 150백만×20개社×80%, (경영혁신) 37.5백만×20개社×80%, (기업회복) 10백만×76개社×80%
- (2단계 처분시설 건설) '22년, 233억원 → '23년 436억원
- (신성장기반자금) '23년 2억원(120억원 규모 융자, 이차 3%)

- 체코,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,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(189→226억원)

- (국제협력) 한국원전 해외홍보(25억원), 수출대상국 인력교류(2억원) 등
- (해외수주) 해외입찰 참여 등 수주지원(8억원), 원전 중소기업 수출실태 조사(1억원)
- (정보제공) 해외원전시장 정보제공(3억원), 수출대상국 입찰요건 지원(3억원) 등

- 소형모듈원자로,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&D, 전문인력 육성,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 지원(0.5→0.6조원)

- (R&D)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(70억원, 총 0.4조원)^{신규}, 원전해체(372억원, 총 0.35조원)^{신규} 등
- (인력양성) 재·퇴직자 교육(27억원), 전공자 지원(17억원), 고준위방폐물(10억원) 등
- (기타 인프라) 주민복지사업 추진,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·운영 지원 등

- (혁신인재) 양자·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를 16.2→20.3만명으로 확대(1.6→2.0조원)

- (미래원천) 양자·우주·기후·신약 등 원천기술분야 전문인력 2.2만명 양성(0.32→0.33조원)
- (산업기술) 반도체·소부장 등 현장인력 전문기술교육 3.9만명 지원(0.2→0.4조원)
- (디지털) SW·AI·보안 등 디지털분야 현장·전문·핵심인력 14.2만명 육성(1.1→1.3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반도체 경쟁력 강화	6,516	10,137	
- 인력양성	1,844	4,498	폴리텍반도체학과 350억원, 반도체특성화대학(원) 570억원
- 기술개발	3,368	3,908	차세대지능형반도체 1,338억원, PIM인공지능 반도체 579억원, K-팹리스육성 215억원
- 인프라	1,109	1,471	나노팹고도화 618억원, 설계검증인프라 140억원
- 사업화	195	260	AI반도체실증 125억원, IP Bank 54억원
○원자력 생태계 강화	5,428	6,726	
- 역량강화, 일감창출 등	269	483	사업화 24억원, 경영안정·기업회복 등 12억원, 2단계처분시설건설 436억원, 이차보전 2억원
- 중장기 기술개발	2,917	3,387	원전해체 35억원,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372억원
- 원자력 인프라 등	1,983	2,526	가산금 등 특별지원 1,035억원,
○ 혁신인재 양성	16,080	20,179	
- 미래원천기술	3,209	3,316	에너지인력양성 433억원, K-Medi융합인재 양성 133억원, 융합형 의과학자양성 107억원
- 산업기술	2,098	4,217	부처협업형 인재양성 1,053억원, 이공계 전문기술 인재양성 158억원
- 디지털	10,773	12,646	디지털혁신공유대학 1,443억원, SW중심대학 838억원,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109억원

- ◇ 시장확보·경제안보에 긴요한 **7대* 핵심전략기술**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**6대 미개척 도전분야**에 총 **5조원** 수준 투자

* 과제분류는 추후 정책 보완시 변경 가능

7대 전략기술	①반도체, ②5G·6G·양자, ③미래 모빌리티, ④우주, ⑤첨단바이오, ⑥이차전지, ⑦인공지능
6대 미개척분야	①핵융합 등 미래에너지, ②난치병, ③식량위기 등 생활안전, ④로봇 등 일상혁신, ⑤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, ⑥우주기초연구 지원

- (**핵심 전략기술**)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전략 기술*분야 4.5조원 투자(3.7→4.5조원)

* ①반도체, ②5G·6G·양자, ③미래모빌리티, ④우주, ⑤첨단바이오, ⑥이차전지, ⑦인공지능

- (우주)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PS) 본격추진,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^{신규} 등(0.6→0.7조원)
- (미래모빌리티) 완전자율주행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R&D·실증기반마련(0.7→0.8조원)
- (통신·네트워크) 6G선도기술 및 양자컴퓨터·통신·센서, AI기술고도화 등(0.9→1.1조원)

- (**미개척 도전분야**)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* 연구 지원(0.3→0.4조원)

* ①핵융합 등 미래에너지, ②난치병, ③식량위기·사회재난 등 생활안전, ④로봇·VR/AR 등 일상혁신, ⑤UAM·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, ⑥우주기초연구지원

- (미래에너지) 핵융합선도기술, 용융염원자로(MSR)원천기술개발^{신규} 등(0.05→0.07조원)
- (난치병극복)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^{신규}, 치매극복연구개발 등(0.04→0.06조원)
- (생활안전) 수자원/수재해 위성 개발, AI기반풍수해위험도예측기술개발(1.0→1.1조원)

- (**민간역량 활용**) 사업성과가 높은 민간연계 R&D 확대

- (민간참여 R&D) 민간투자와의 연계 및 민간-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중심 R&D 사업 확대(+0.26조원)

- (민간先투자) TIPS, 민간투자연계형R&D 등 민간 사업성판단 先투자→後정부매칭(0.4→0.5조원)
- (민관협업) 민간협업체 통한 R&D과제 선정, 실증단계 기업참여 확대 등(0.4→0.5조원)
- (스케일업) 전략기술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등 고성장 스케일업 견인(0.04→0.1조원)

- (성과기반 R&D)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·나눠먹기식 R&D 사업 지원 축소 및 경쟁형·협업형 R&D 확대(+0.2조원)

- (지출효율화) 개인(생애기본연구 등 연구안전성보장), 중소기업 나눠주기식 사업(1.1→0.8조원)
- (다부처 협업) 다목적실용위성개발,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(1.9→2.2조원)
- (경쟁형 R&D)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,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등(0.7→0.8조원)

- (민군기술협력) 우주·반도체 등 안보전략분야 민간 첨단기술 도입 확대 및 산학연 등 민과 軍의 공동기술개발 강화(+0.2조원)

- (민군겸용기술개발) 위성·발사체·반도체 등 첨단기술개발 집중투자(0.11→0.15조원)
- (국방협업형 핵심기술) 산학연 협업을 통한 민간주도 국방기술개발(0.3→0.4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핵심전략기술	37,084	45,123	
- 반도체	4,945	6,098	•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(140억원 ^{신규}) • 차세대지능형반도체(설계·제조) (686→743억원)
- 미래모빌리티	6,661	7,846	• 도심항공모빌리티감시정보획득체계개발(42→76억원) • 차세대자율주행차량통신기술개발 (53→96억원)
- 5G·6G·양자	2,274	2,952	•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(295→325억원) •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 (100→140억원)
- 기타	23,204	28,227	•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(482→1,059억원) •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 (183→289억원)
○ 미개척 도전분야	3,412	4,257	
- 에너지	514	750	• 용융염원자로(MSR) 원천기술개발사업(45억원 ^{신규}) •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기발(70억원 ^{신규})
- 난치병	422	569	• 뇌기능규명·조절기술개발 (72→96억원) •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(112→134억원)
- 생활 안전	1,035	1,132	•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(69억원 ^{신규}) •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 (30→85억원)
○ 민간역량활용			
- 민간참여 R&D	8,593	11,190	• 창업성장기술개발(TIPS) (2,157→2,681억원) • 민간투자 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(308→612억원)
- 성과기반 R&D	51,696	59,160	•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(200→240억원)
- 민군기술협력 (민군겸용·국방협업형)	3,634	5,732	• 위성탐재 신호처리장치 기술개발 (11→86억원) • 항공용 고출력 왕복엔진 개발(무인정찰항공기)(100→135억원)

3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

(8.1→8.9조원)

- ◇ AI·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(0.3→0.4조원)
- ◇ 경제·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으로 新 성장동력 확보(7.8→8.5조원)

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】

(0.3→0.4조원)

- (국민)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바일신분증 등 18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* 추진(0.1→0.2조원)

* 모바일 주민등록증, 통합주소체계, AI 복지사, 디지털 국민정책제안 등

【 참고 :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로 달라지는 일상 】

①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하기

<현재 : 실물 신분증 온라인 사용> 신분증 사본 제출 → 추가 인증(ARS, 계좌 인증 등)
<개선 : 온라인 기반 신원확인> 모바일 주민증 제출로 인증 완료(추가 절차 x)

② 3차원 입체주소체계에서 길찾기

<현재 : (지상)도로, 건물 단위> 도로 → 건물 입구(건물 내부 안내 불가)
<개선 : 입체도로, 건물 내부> 도로 → 건물 입구 → 승강기 → 복도 → 방 입구

- (정부) 데이터 연계·통합 확대*, AI 기반 데이터분석 강화** 등을 통해 정부의 과학적 정책결정 뒷받침(0.02→0.05조원)

* 업무별 공유 DB 구축 확대(3→8개 +60억원),

** 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수립(복지·의료·세금·안전 등 4개, +16억원) 신규

- (기업)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 혁신서비스 창출 지원(0.2→0.2조원)

* 민간·공공 API 연계 활용 신규, 데이터 레이크 구축 신규, 공공·민간부문 마이데이터 유통 등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1.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	658	1,540	
- 모바일 주민등록증	-	170	비대면 민원처리 및 혁신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
- 클라우드기반 통합주소체계 구축	-	67	현재의 2차원 평면 주소 시스템을 3차원 입체 체계로 전면개편
-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	134	181	입체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주소 DB 구축
- 고정밀 전자지도(1:1000)	100	566	입체주소 구축 기반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
2.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	243	546	
-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	208	222	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정책과제 분석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자원시스템	35	211	관련 시스템 통합으로 체계적 방역대응 지원하고, 감염병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 강화
3. 데이터 유통·결합 촉진	1,981	1,964	
- 초거대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	-	146	데이터레이크 및 혁신서비스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
-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	60	136	본인 데이터의 전송, 정정,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

- (녹색경제 기반구축) 경제·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개선·금융·기술 등 맞춤형 지원(3.2→3.4조원)
 - '27년까지 모든 배출권 할당기업(684개사)에 대해 설비전환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공정혁신 투자 확대(0.5→0.6조원)
 - (설비전환) 할당업체 첨단설비 지원(13개사), 스마트 생태공장(90개) 등(0.2→0.3조원)
 - (녹색산업) 초순수 공업용수·기후테크 등 유망 환경기업 육성(656→710억원)
 - (산업단지)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탄소중립형 산단 10→15개 확대(430→614억원)
 - 친환경·탄소중립 설비 등의 대규모·안정적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 3.9조원 발행 지원 신규 등 녹색금융 3.8→9.4조원 확대
 - (대규모 투자) 녹색채권 3.9조원, 녹색금융 이차보전 3.52조원 등 7.6조원 공급(860억원)
 - (중소기업) 녹색보증 1조원, 유동화 채권 0.1조원(신규) 등 1.8조원 공급(6,555억원)
 - CCUS, 대체 에너지원 활용 기술 등 혁신 R&D (1.9→2.0조원)
- (온실가스 감축) 과학적·실용적 2030 NDC(온실가스 감축 목표) 달성을 위해 수송·폐기물 등 감축효과가 큰 부문 중점 투자(4.6→5.1조원)
 - 글로벌시장 內 경쟁력이 높은 수소 상용차 지원 강화,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설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(3.3→3.8조원)
 - (무공해차·인프라) 수소버스 보조금 인상 및 연료전지 교체 신규지원 등(2.8→3.3조원)
 - (조기폐차) 4등급 경유차 9만대, 건설기계 1만대 보조금 신규지원 등(3,360→3,987억원)
 -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4→6개소(누적),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4→8개소(누적) 등 순환경제 기반 조성(0.30→0.32조원)
 - 다회용기,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·수도·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(10→40만명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1. 녹색경제 기반 구축	31,971	34,351	
- 탄소중립 설비 지원	2,388	3,096	-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등(1,221→1,617억원), 스마트생태공장(606→909억원) 등
- 녹색금융 공급	6,657	7,415	-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(2,114→2,789억원) 등
- 탄소중립 R&D	19,394	20,045	- 탄소 포집·저장·활용 기술 개발(1,854→2,564억원)
2. 온실가스 감축	46,315	50,744	
- 무공해차 보급 지원	24,078	27,402	- 무공해차 보조대수 확대(23.6→29.0만대) 등
- 조기폐차 지원	3,360	3,987	-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35만대 조기폐차 지원

4 산업·기업 역동성 제고

[5.0→5.6조원]

- ◇ 수입선 다변화, 국산화 R&D, 공공비축 등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(3.1조원)
- ◇ 자동차·조선·콘텐츠 등 주요 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 강화(1.4조원)

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】

[2.7→3.2조원]

- (수입선 다변화) 민간의 해외유전·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(출·용자) 2배 확대(0.1→0.2조원)
- (국산화 R&D) 소재·부품·장비, 조선·자동차,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·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(2.1→2.3조원)
- (생산설비 확충)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투기업이 국내 생산 설비 신증설시 현금지원 인센티브(지원비율 +10%p) 강화
- (공공비축)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(니켈·알루미늄 등) 및 석유 공공비축 확대(0.32→0.57조원)

* (알루미늄, 니켈 등 6종) 비축자금 500억원 추가 조성, (석유) 25→36만톤

【 수출·투자 여건 개선 】

[1.1→1.1조원]

- (수출) 中企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 1조원 보강(+500억원)
 - * 무역보험·보증공급 규모 : (22) 210조원 → (23안) 211조원
 - 국내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물류바우처 지원 기간 1년 연장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(1,282→1,526개소)
- (투자) 국가전략기술 보유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(투자액의 40→50%) 및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확대(0.2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	26,841	31,598	
- 수입선다변화	1,091	2,159	해외자원개발용자 1,754억원 유전개발출자 301억원 등
- 국산화 R&D	21,441	22,639	소부장 17,896억원, 반도체 1,920억원 등
- 생산설비확충	1,070	1,070	외투기업지원 500억원 U턴기업지원 570억원 등
- 핵심자원비축	3,239	5,730	석유·석탄비축 693억원, 농수산물 4,068억원 등
○ 투자·수출 여건 개선	10,953	10,947	
- 지역투자촉진	1,881	1,998	신증설투자 지원 기업수 확대(73→75개)
- 수출물류지원	170	231	물류바우처 1년 한시 연장(170→231억원)

【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 】

[1.2→1.4조원]

- **(자동차)**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부품기업 전환 지원*(64→111개사) 및 종사자 교육(902→2,080명) 확대(0.5→0.6조원)
 - * 시제품 제작, 경영 컨설팅, 판로개척 등 종합 지원
 -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(818억원),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(1,568억원)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R&D 강화
- **(조선)**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양성(1,500명, 60억원^{신규}), 소부재 생산 기능화 기술개발(32억원^{신규}) 등 지원(0.2→0.3조원)
- **(콘텐츠)** 모태펀드·이차보전 등 정책금융* 지원을 강화하고, 콘텐츠기업 글로벌 진출 거점(10→15개) 확대 등(0.2→0.4조원)
 - * IP펀드 등 6개 펀드에 2,200억원 신규 출자, 민간금융 3,200억원 규모 이차보전
 -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OTT 방송 제작지원 (IP 확보 전제) 등 방송콘텐츠 산업 집중 투자
- **(관광)** 관광산업 회복·도약을 위한 “한국관광의 해”(100억원^{신규})”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외 홍보·마케팅 확대(797→832억원)
 -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위한 의료·웰니스 관광 확대(120→132억원),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(811→966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자동차	4,781	5,814	
-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	58	80	지원 부품기업수 확대(64→111개)
- 자율주행기술개발	1,204	1,568	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사업
○ 조선	2,278	2,587	
- 지역조선업 인력양성	-	60	중소조선업 생산인력 양성(1,500명, 신규)
- 선박소부재생산 지능화혁신기술개발	-	35	선박용 판재 가공·용접 등 자동화 기술개발
○ 콘텐츠 산업	2,169	3,668	
- 콘텐츠 정책금융	1,708	2,440	펀드 2,200억원, 이차보전 40억원, 보증 200억원
-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	461	1,228	신기술접목 후반작업 지원, IP 확보 전제 OTT 특화방송 제작지원 등
○ 관광	2,616	2,770	
- 한국방문의 해	-	100	신규(+100억원)
- 광역권 관광개발	811	966	관광거점도시,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 등

5 중소기업,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[3.8→4.6조원]

- ◇ 민간투자 유치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(TIPS) 확대(500→720개사)
- ◇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, 온라인판로·스마트화 지원 강화

【 중소기업 혁신 】

[3.2→3.6조원]

- (벤처·창업) 민간으로부터 경쟁력·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·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(0.3→0.4조원)
 - * Pre-TIPS(사업화 지원, 30→43건) → TIPS(R&D 500→720건) + 사업화·해외마케팅(525→756건) → Post-TIPS(사업화 지원, 50→72건) 등
 - 글로벌기업·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 촉진(346→501억원)
 - * 글로벌기업 협업(200→270개사), 대기업-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(60→85건)
 - 청년·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강화
 - * 창업중심대학(6→9개),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(1→3개) 확대 등
- (중소기업) 우수기업에 신성장자금 공급을 확대(1.6→1.7조원) 하고, 규제혁신, 제조환경 스마트화,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
 - * 규제자유특구 안전성검증(+15억원),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(+8억원) 등
 - ** 해외 특허분쟁 대응지원(+66건), 기술탈취 보호지원(+91건) 등
 - 성장단계별·협업종류별 맞춤형 R&D 지원 확대(0.6→0.7조원)
 - *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(3,205→3,641억원), 상용화기술개발(2,280→2,529억원) 등
 - 공동 활용 물류인프라 신설(+135억원) 등 유통물류 안정화
 - * 인천공항 부지 내 스마트 트레이드허브 신규 구축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민간주도 벤처창업 지원	4,748	6,343	
- TIPS 및 연계지원	2,935	3,788	팁스·사업화/마케팅, 프리·포스트팁스
- 창업중심대학	459	673	6개소→3개소(일반형 2+혁신형 1) 신설
- 글로벌기업 협업	300	405	글로벌기업 협업 지원(200→270개사)
-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76	96	대기업-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(60→85개사)
○ 中企 혁신성장 촉진	27,245	24,273	(융자 포함 실지원규모 27,245→29,168억원)
- 혁신성장 자금 지원	16,200	14,886	융자규모 확대(1.6→1.7조원)+이차보전 도입
- 연구개발 지원	5,959	6,657	기술혁신·상용화기술개발, 산학연CollaboR&D 등
- 수출·물류 지원	1,194	1,512	스마트트레이드허브 신설, 물류바우처 등
- 규제특구 안착화 지원	16	58	실증특례 연장기업 안전성평가비용 지원 신설

【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· 재기 지원】

[0.6→1.0조원]

- **(회복 · 재기)**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→폐업→재취업(창업)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(2.9→3.4만명)
 - 30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채무조정프로그램* 지속 지원(0.3조원)
 - * 캠프를 통해 소상공인 (잠재)부실채권 인수 → 금리인하·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
 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3.5→4조원으로 확대
- **(온라인 · 스마트화)** 온라인 판로지원 6→7만개로 확대 및 스마트공방 1,000→1,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(0.16→0.2조원)
- **(기업가형 소상공인)** 유망 소상공인의 팀빌딩·사업화·금융지원을 종합지원하고, 브랜드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(287→844억원)
 - (강한소상공인) 팀빌딩(100→350개)·사업화(30→105개) 확대 및 펀딩·융자지원 신설(29→530억원)
 - (브랜드화) 골목형 로컬브랜드 육성(4개소, 10억원)
 - (지역상권) 지역상권 비즈니스전략 연구기획을 위한 상권발전소 신설(10개상권, 10억원)
- **(준비된 창업)** 청년 등의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을 확대(500→575개) 하고 체험점포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단계적 개편(199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- 소상공인재기지원	1,196	1,514	희망리턴패키지 2.9→3.4만명
- 소상공인채무조정	-	2,800	캠프를 통한 30조원규모 소상공인 채무조정
- 온누리상품권발행지원	2,915	2,898	온누리상품권 발행액 3.5→4조원
- 온라인 판로지원	905	944	지원대상 6→7만명 확대 (교육 +0.3만명, 모바일 +0.7만명 등)
- 스마트화지원	770	1,048	스마트상점 미래형점포 +600개 신규지원 스마트공방 1,000→1,500개 확대
- 상권활성화	258	304	상권활성화 신규 7개소(대형 3개, 소형 4개) 상권발전소 신설 10개소(10억원)
- 로컬브랜드육성	-	10	골목형 로컬브랜드 4개소 육성
- 강한소상공인육성	29	530	팀빌딩 350개, 사업화 105개, 크라우드펀딩지원 1,000개, 매칭융자 400억원
- 신사업창업사관학교	198	199	사업화지원 500→575개, 체험점포 3개소 창업지원플랫폼으로 개편

◇ '23년에 달라지는 모습

핵심과제	주요 프로그램	'22년	'23년
과학기술 장군 육성	첨단 국방기술개발 (우주 · AI · 사이버)	244건	390건
	병 봉급 (사회진출지원금 포함)	82만원	130만원
	병 급식비 단가	1.1만원	1.3만원
능동적 외교협력	소규모 무상원조	54개국	118개국
	중소국가 고위급 협력	-	54개국
일류보훈	보훈급여금 인상률	5.0%	5.5%
	참전명예수당	35만원	38만원
	위탁병원	640개	743개
감염병 대응	긴급치료병상 구축	-	1,700개
	항체양성률 조사	-	4만명
	후유증 조사	-	1만명
재난안전	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	-	90개소
	대심도 빗물저류터널	-	3개소
	재난 · 안전 헬기	신규6기	신규8기
	영상증인신문소	-	25개소

1 과학기술강군 육성 지원

[54.6→57.1조원]

- ◇ 한국형 3축체계,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증강 지원(+1.0조원)
- ◇ 병 봉급 인상(68→100만원^{병장}), 급식·주거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

【 첨단전력 증강 】

[5.9→6.9조원]

- (3축체계) 장사정포 요격체계,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* 관련 첨단무기체계 확충(4.8→5.3조원)
 - * 장사정포 요격체계(189→769억원),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(210→1,292억원), 대형기동헬기-Ⅱ(353→3,507억원), 장보고-Ⅲ Batch-I(825→2,486억원) 등
- (유·무인 복합) 로봇·드론을 활용한 무인기·무인수색차량 등 유·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(0.003→0.17조원)
 - * 정찰용 무인항공기(신규, 1,262억원), 무인수색차량 연구 개발(22→356억원) 등
- (우주·사이버) 정찰·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(0.03→0.07조원)
 - * 초소형 위성체계(112억 → 270억원),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(200→398억원) 등
- (핵심기술) AI·극초음속 등 핵심·미래도전 기술개발 강화(1.0→1.4조원)
 - *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(94→146억원), 저피탐(스텔스)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(41→154억원),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(1.6→15억원) 등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한국형 3축 체계	48,036	52,549	전략표적 타격,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, 압도적 대응 능력 강화
○ 유·무인 복합	31	1,660	무인,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강화
○ 우주·사이버	312	683	적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·정찰 능력 확보, 사이버 등 미래전장 요구 전력에 대한 투자 강화
○ 핵심 원천 기술	10,332	13,959	미래 첨단 무기에 필요한 핵심·원천기술 확보 (핵심기술개발,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)

- **(병사)**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,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지급
 - **병 봉급**(사회진출지원금 포함) 82→130만원으로 인상(~'25년 205만원)
 - * 병 봉급(병장기준) : ('22) 68 → **('23) 100** → ('24) 125 → ('25) 150만원
 - 사회진출지원금 : ('22) 14 → **('23) 30** → ('24) 40 → ('25) 55만원
 - **급식급식비** 인상(1.1→1.3만원/1日), 더 좋은 병영식당 확대(3→297개)
 - 주거'23년부터 2~4인실 생활관 52동 신축(기존 9인실)
- **(군 간부)** 우수자원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으로 정예장군 육성
 - **선발단기복무장려금** 50% 인상(장교 6→9, 부사관 5→7.5백만원)
 - **지휘여건**소대장 활동비 2배 인상(병사 1인당 3→6만원) 및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(年 240→360만원, 대대 기준)
 - **복무여건**주택수당(月 8→16만원), 국민평형(32평형) 군 관사(신규, +504세대) 및 1인 1실 간부숙소 지속 추진(4,712억원) 등 주거지원 강화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병사	48,862	62,070	
- 병 인건비	23,050	28,259	병 봉급 월 67.6만원 → 월 100만원(병장 기준)
- 사회진출지원금	2,190	6,610	사회진출지원금 월 14.1만원 → 월 30만원
- 급식	15,538	17,170	급식단가(1日) 인상(1.1→1.3만원, +18.2%)
- 더 좋은 병영식당	-	304	시범 3 → 신규 297개 도입 확대
- 병영생활관	1,885	3,553	9인실 → 2~4인실 생활관 52동 신축
○ 군 간부	5,860	6,687	
- 단기복무장려금	329	587	장교 6→9백만원, 부사관 5→7.5백만원(50% 인상)
- 지휘활동비	187	336	(소대장) 병사 1인당 年 3 → 6만원 (주임원사) 年 240만원 → 年 360만원(대대기준)
- 주거	4,768	5,241	(주택수당) 월 8만원 → 월 16만원 (관사) 신규 총 644세대(32평형 504세대) (간부숙소) 신규 3,331실

2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

(4.0→4.5조원)

◇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**ODA 대폭 확대(+14.2%)**

◇ **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능동적 외교 지원 강화**

○ **(ODA 확대)**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대폭 확대(3.9→4.5조, +14.2%)

*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: '19년 대비 '30년까지 ODA 2배 이상 확대(3.1→6.2조)

- 러-우크라이나 전쟁,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응을 위한 해외 긴급 구호(1,236→1,454억원, +218억원) 지원 확대

- 글로벌 보건·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 확대

*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-A 1억불 기여 정상 추진('23-'25년 3억불)

**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(+0.1조원)

-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교섭을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(118개국, +665억원), 연안국과의 협력(+139억원) 등 확대

○ **(능동적 외교)** 2025 APEC 정상회의(+6억원), 확산방지구상(PSI) 고위급 회의(10억원^{신규}), 신안보포럼(+16억원) 개최 지원 등 글로벌 이슈 선도

- 한국학기반확대(+23억원) 및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(42억원^{신규}), 재외국민 보호 강화(+10억원)를 통한 외교활동 인프라 확충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- ODA 총 규모	39,419	45,031	대외경제협력기금, KOICA 국별 협력사업 등
- 인도적 지원	2,366	2,744	ACT-A 1억불 및 해외 긴급 구호
- 국제기구 사업분담금	1,686	2,767	글로벌 보건 기여 확대(+0.1조원) 등
- 소규모 무상원조	115	780	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가가능성 있는 개도국 대상(118개국)으로 지원확대 및 강화
- 한국학기반확대	157	180	해외 유력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 (기금형 +5개교, 급여형 +4개교)
- 비대면 영사시스템	-	42	재외국민이 별도 인증서 없이 여권만으로도 비대면 영사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

◇ **보상금 등 5.5% 인상**(‘08년 이후 최대), **참전명예수당 인상**(35→38만원)

◇ **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**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

- **(보상급여)** 보훈급여금을 ‘08년 이후 최대폭인 6.0%* 수준 인상
 - * 보상금·수당 등 기본인상률 5.5% + 급여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 0.5%
 - 참전명예수당도 역대정부 최대 폭*으로 인상(‘27까지 +15만원)
 - * ‘27년까지 매년 +3만원씩 총 +15만원 인상 (‘22: 35→‘23: 38만원)
 - 상대적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(총 9%), 6.25 전몰군경 신규자녀(총 20.5%)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하는 등 급여격차 개선
- **(사각지대 완화)** 저소득(중위 50% 이하)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‘25년까지 단계적 폐지 신규
 - * 중증장애인(‘23) → 노인(‘24) → 전면 폐지(‘25) 순으로 폐지(보훈대상자 기준)
 -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,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(현 75세 이상) 폐지 신규 (+1.8만명)
- **(의료지원)** 위탁병원 확충*, 부산요양병원 개원,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(+96억원) 등 의료접근성 강화
 - * 신규 103개(640→743개) 중 중증질환 치료 병원급 5년만에 추가 지정(+43개)
- **(보훈문화)** 보훈 체험프로그램 확대(32→182억원),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*,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 존중 문화 확산** 등 지원
 - *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(손)자녀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 등(4인 기준, 75→153백만원)
 - ** 정전 70주년 계기로 고령의 6.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 증정 등

(단위: 억원)

구 분	‘22년	‘23년案	비고
○ 보상수준 강화	45,569	47,618	·(보훈급여금) 기본 +5.5% 인상+급여격차 개선 ·(참전명예수당) ‘27년까지 +15만원 인상 (매년 3만원씩 인상)
○ 의료지원 강화	6,619	6,882	·(보훈병원) 부산 요양병원 개원 소요 등 ·(위탁병원) 본인부담금 감면 연령기준 폐지
○ 보훈문화 확산	937	1,289	·(보훈정신) 보훈문화 콘텐츠·프로그램 개발 등 ·(예우강화)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 등 ·(정전70주년) 6.25참전유공자 제복증정, 기념행사

4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

[6.9→4.5조원]

◇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「**사전예방-방역대응-사후보상**」 전반의 **고위험군** 집중 관리

① 사전 예방	⇒	② 방역 대응	⇒	③ 사후보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백신 구매 집중 • 근거 확보 • 대응역량 강화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단검사 • 치료제 및 치료비 • 통합플랫폼 구축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상 등 인프라 • 생활지원·유급휴가비

【 사전 예방 】

[3.5→1.1조원]

○ (**백신구매·접종**) 면역력 확보를 위해 백신 1.5천만회분 추가 도입,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차질없는 접종 뒷받침(0.9조원)

* '22년 기 확보 물량 1.2억회분 + '23년 1.5천만회분 추가 도입

○ (**조사·분석**)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(5.4만건), 분기별 항체양성률 조사 등 감염병에 대한 근거 중심 방역 뒷받침(0.03조원)

- (변이 분석) 변이 조기 인지를 위해 표본 감시·분석 물량 대폭 확대(1.0→5.4만건)
- (항체양성률 조사) 4만명 대상 자연감염 여부, 지역사회 유행 여부 등 조사
- (후유증 조사) 1만명 대상 3년 장기추적 관찰 연구('22~'25년)

○ (**감염병 대응역량**)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속·효율적 대응을 위해 백신·치료제 개발 R&D,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투자(0.2조원)

- (항바이러스 치료제) 감염체 구분 없이 RNA 바이러스 기전에 작용하는 **신약 개발**^{신규}(38억원)
- (인력 양성)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양성(60→200명), **감염병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**^{신규}(50명)

【 방역 대응 】

[1.6→1.6조원]

○ (**진단검사**)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자,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(1.2조원)

*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외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용 RAT 병행

- **(치료제·치료비 지원)** 적극적 처방 통한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(0.3조원)
 -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제 1.8만명분도 추가 구매하고,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지속 지원
- **(플랫폼)**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, 감염병 예측·분석을 위한 원헬스 위해정보시스템 등 구축(0.02조원)

【 사후 보상 】

[1.8→1.8조원]

- **(병상 등 인프라)** 상시 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* 1,700개 **신규**,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** 구축 등 인프라 확충(0.3조원)

* 감염병 위기 발생시 중증환자, 분만·투석·소아환자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

** 호남권('18년~), 충청·경남권('20년~), 경북권('21년~), 수도권('22년~)

- **(생활지원·유급휴가비)** 코로나19 확진시 취약계층 등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·유급휴가비 지속 지원(0.1조원)

* (생활지원비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, (유급휴가비)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사전예방	34,710	11,409	
- 코로나 예방접종	32,649	9,318	1.5천만회분 백신 도입, 접종시행비 등
- 면역도 조사체계 운영	-	77	4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 수행
- 변이 바이러스 분석	19	108	5.4만건 변이 바이러스 분석 지원
- 코로나 후유증 조사	-	73	1만명 대상 장기추적 관찰 연구 수행
-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	-	38	신변종감염병(Disease X) 대비 치료제 개발
○ 방역 대응	16,496	16,239	
- 진단검사비	6,260	11,731	고위험군 PCR 검사 지원
- 치료제 구입비	3,933	3,843	먹는 치료제 40만명분, 주사제 1.8만명분
- 격리입원치료비	237	130	연간 입원치료비 지원
-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	67	242	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 완료
○ 사후 보상	17,783	17,795	
- 긴급치료병상	-	2,573	긴급치료병상 1,700개 신규 구축
- 권역 감염병전문병원	266	187	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지속 구축
- 생활지원·유급휴가비	2,406	1,216	취약계층 중심 생활지원·유급휴가비 지원

5 재난 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

[6.3→7.3조원]

- ◇ 수해 등 재난 예보·예방·대응·복구지원체계 고도화(5.0→5.8조원)
- ◇ 소방·군·경찰 등 현장대원의 개인장비 품질개선·신속 보급
- ◇ 강력범죄 출소자 전자감독 강화,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번호 등 확대

【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】

[5.0→5.8조원]

- (예보기술·플랫폼) AI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, 한강유역 침수 위험 지도 제작(~'23년) 등 스마트 예보체계 구축(1,662→2,000억원)
 - (AI 홍수 예보)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개발 및 수위관측소 확충(170억원)
 - (댐·하천 디지털 트윈) 고정밀 3차원 수재해 예측시스템 개발(6→54억원)
 - (도시 침수·범람 지도)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(20→80억원)
- (전체 물길 모니터링) 실시간으로 국가·지방·소하천 등 모든 물길의 수위·유량을 자동 모니터링하고, 홍수위험 경보전송
 - * 국가하천 전구간의 2,730개 지점에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설치(150억원) '23~'27년 주택·인구밀집지와 인접한 소하천 전체(2,200개소) 수위계측 시스템 설치^{신규}
 -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AI홍수 예보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정확한 홍수예보·침수위험 지도 제작 등에 활용
- (하천 등 위험지역정비) '26년까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90% 달성, 재해위험(침수위험 등) 잔여지구 100% 착수를 위한 투자 가속화
 - '23년 국가하천 3,603km를 점검·보수하는 한편, 재해위험지역 정비(691→740개소), 풍수해종합정비(55→80개소) 대폭 확대
- (도시침수 대응) 도림천·강남역·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(총사업비 약 9,000억원) 설치^{신규}(+85억원)
 -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개소 추가 설치(695→770억원)
 - 통수(通水)능력 증대,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용량 확대 투자 대폭 확충(1.4→1.6조원)
 -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 도심하상도로에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^{신규}('23년 90개소, +68억원)

- **(복구지원)** 대형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.5배 확대(1,000→1,500억원),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(주택 40→49만명 등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수해대응	50,233	57,708	
○ 예측·예보	1,662	2,000	AI기반 홍수예보 개발 등(170억원) 3차원 수해예측시스템(6→54억원)
○ 예방인프라	29,132	33,640	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3개소(신규85억원) 재해위험지구 정비(6,178→6,820억원) 국가하천정비(4,100→5,010억원) 하수관로정비(8,627→9,020억원)
○ 대응·복구	19,440	22,067	침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(신규68억원) 재난대책비 규모 확대(1,000→1,500억원) 풍수해 보험료 지원 확대(254→364억원)

【 소방·경찰 개인장비 및 헬기 확충 】

[0.2→0.3조원]

- **(재난장비)** 산불·긴급구조 등 재난대응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헬기 증강(+2대)·노후대체(+6대) 투자 **신규** 확대(신규 8대, +448억원)
- **(안전장비)** 군·경찰·소방·해경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원의 피복·헬멧 등 개인장비 품질개선 및 신속 보급(415→1,365억원)
 - 軍 방탄헬멧·전투조끼·응급키트 등 신속 보급(331→1,032억원)
 - 소 지역경찰·수사형사 대상 '경량 호신용 조끼' **신규** 지급(+124억원)
 - 소 해경 특공대 방검부력조끼·진압헬멧 **신규** 보급 등(26→75억원)
 - 소방청 직속 소 현장대원 화재진압 안전장비 확대(4→14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장비 중점투자	1,643	3,234	
① 헬기 확충	1,228	1,869	(22년) 신규 6대 → (23년) 신규 8대
② 현장공무원 보호장비	415	1,365	
- 해경	26	75	(해경) 해상진압복헬멧방검부력조끼 방검복테이저건 방폭복 함정안전헬멧구명조끼 등 22종 1.5만개
- 소방	4	14	(소방) 개인가이드라인, 무선통신 라이트라인, 휴대용비상화확등 등 24종 1,962개
- 경찰	54	244	(경찰) 경량조끼, 중형방패등 4종 5.3만개
- 군	331	1,032	(군) 경량방탄헬멧(2,787개), 전투조끼(30,359개) 등

【 생활 밀착형 안전 】

[1.05→1.1조원]

- **(교통안전)**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고,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·보도정비(9,174→9,692억원)
 -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확대(8,466→10,925대) 운영,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^{신규}(‘23년 25대, 10억원)
- **(먹거리안전)**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 감안,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, 유해물질 잔류검사 범위 확대(291→347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생활밀착형 안전투자	10,536	11,215	
-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	9,174	9,692	보행자 교통안전 시설 설치, 도로보수 등
- 교통과학장비관리	1,071	1,176	무인단속장비 운영 등(+95억원) 이륜차 후면단속장비(^{신규} +10억원)
- 수산물 위생관리	234	237	방사능분석장비(+15대)
- 해양방사성 물질 감시	39	59	해수 검사 지역 확대(45→52개소)
- 식품 잔류물질 검사	18	51	검사 대상(농산물→ 농·축·수산물)

【 범죄예방·피해지원 】

[0.1→0.12조원]

- **(범죄예방)**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, 치료·취업알선 등 사회복귀 지원(274→353억원)
- **(피해지원)** 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 확대(35→43명) 및 법정 출석을 대체하는 영상증인신문소(25개소) 신설 ^{신규}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2년	'23년案	비고
○ 범죄예방·피해지원	966	1,180	
- 전자감독 강화	274	306	· 고위험자용 강화스트랩 부착 등
-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	-	47	· 2개소 시범운영('23 신규)
- 영상증인신문소	-	13	· 25개소 신설
- 피해자국선변호사 확대	34	42	· 35명→43명 확대

1. 보건 · 복지 · 고용 분야
2. 교육 분야
3.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4. R&D 분야
5. 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 분야
6. SOC 분야
7. 농림 · 수산 · 식품 분야
8. 환경 분야
9. 국방 분야
10. 외교 · 통일 분야
11.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12. 일반 · 지방행정 분야

- ◇ 소득·고용·주거 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
- ◇ 장애인·노인·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- ◇ 감염병 예방·관리 지원 지속 및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

□ 소득·고용·주거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

-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, 재난적의료비·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 보강
 -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(+5.47%, 4人)으로 생계급여액 상향*,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+23.3% 인상 등 급여액 확대
 - * 최대급여액: (1인) 月 58.3→62.3만원, (4인) 月 153.6→162만원
 - 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*(+4.8만가구)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 46→47%로 확대(+3.4만가구)하여 사각지대 보완
 - * 재산기준(서울기준): (기본재산공제) 69→99백만원, (주거재산한도) 120→172백만원
 -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*하고,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상향하여(월 154→162만원)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
 - * (의료비기준) 연소득 15→10% 초과, (재산기준) 5.4→7억원
- 두루누리 사업 지원요건 완화*로 저임금 취약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, 구직 기간 중 소득안정 지원 강화
 - * (소득기준) 최저임금 120→130% 이하, (사업장기준) 예술인특고 10인미만→소사업장 종사자
- 쪽방·반지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*하고,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(20만명) 및 피해자 긴급대출(0.2조원) 신규 지원
 - * 이사비·생필품 지원 40만원,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,000만원

□ 장애인·노인·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

- 장애인의 돌봄·소득·생활·의료 분야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
 - 발달장애인 낮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(日 7.5→8시간)하고,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돌봄(최대 7일) 신규 지원

- '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인상(月 4→6만원)하고, 장애인 연금 지원단가도 상향(月 30.8→32.2만원)
-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고,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신규 구축(14개) 등 의료인프라 확대
-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인상(月 30.8→32.2만원)하고,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(50→55만명)
-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(月 30→40만원)하고,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(0.8만명) 신설
- 한부모·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*
- * (한부모) 중위 52→60% 이하, (청소년 한부모) 중위 60→65% 이하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, 정신질환자 조기발견·치료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
- 코로나 백신 1.5천만회분 구입 및 접종(0.9조원),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1,700개 구축(2,573억원) 등 감염병 예방·관리 지원
-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검진 확대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신규지원, 정신질환자·고위험군 전주기 지원 인프라* 확충(2,124→2,205억원)
- * 정신건강복지센터(예방·재활) 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(조기개입) - 자살예방센터(사례관리)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고
▪ 기초생활보장	167,638	191,355	▪ 생계급여 +7,494억원, 의료급여 +9,751억원
▪ 취약계층지원	47,884	52,045	▪ 장애인활동지원 +2,514억원
▪ 공적연금	630,096	713,236	▪ 국민연금급여지급 +56,203억원
▪ 보훈	59,308	62,182	▪ 보상금 등 +1,691억원, 참전명예수당 +208억원 등
▪ 주택	358,263	334,600	▪ 분양주택(융자) +10,793억원
▪ 사회복지일반	9,473	10,103	▪ 사회서비스 펀드 +100억원
▪ 아동·보육	91,827	98,218	▪ 부모급여 +12,518억원
▪ 노인	204,592	231,143	▪ 기초연금 지급 +24,164억원
▪ 여성·가족·청소년	14,289	15,130	▪ 아이돌봄지원 +768억원
▪ 고용	259,383	236,137	▪ 청년일자리창출지원 +3,813억원
▪ 노동	100,736	107,876	▪ 산재보험급여 +6,460억원
▪ 고용노동일반	6,045	6,340	▪ 고객상담센터 운영 +173억원
▪ 보건·의료	101,264	76,541	▪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△23,331억원
▪ 건강보험	119,242	124,102	▪ 건강보험가입자지원 +4,710억원
▪ 식품·의약품·안전	6,619	6,693	▪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(R&D) +74억원
합 계	2,176,658	2,265,700	4.1% 증가

〈참고〉 일자리 분야

◇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

□ 직접일자리,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, 직업훈련,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은 강화

○ 첨단분야 직업훈련 확대, 기업·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도화*

* 전달체계 효율화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생계지원 강화 등

○ 직접일자리 사업*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강화**, 고용장려금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여 지원

* 직접일자리 규모 : ('22) 103.0 → ('23안) 98.3만명(3.2→3.1조원, △4.7만명)
(노인일자리 △2.3, 지역방역일자리(한시) △0.7, 아동안전지킴이(지방이양) △1.2만명)

** 노인일자리 내 민간·사회서비스형(+3.8만명) 확대, 고령자 고용장려금(0.9→6.1만명) 확대

□ 신산업분야 인력 확충 및 맞춤형 훈련 신설 등 직업훈련 강화

○ (첨단산업) 대기업이 설계·운영하는 직업훈련 확대·개편(K-HighTech Training, +0.8만명),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* 확대

*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구축(10개소), 폴리텍 첨단산업학과 신설·개편(25개)

○ (국가기간산업)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(일반직종 +5%, 인력부족직종 +10%)·훈련장려금(월11.6→20만원) 인상(6.4→7.1만명, +0.1조원)

○ (맞춤훈련) 중소기업(기업직업훈련카드 +1.5만개), 플랫폼종사자(특화 훈련 +20만명), 중장년(DX-Academy, +21억원) 등 맞춤형 훈련 신규 지원

□ 기업의 고용창출,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

○ (전달체계) 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(새일센터, 중장년센터 등)와 통합네트워드를 구축(4개소, +180억원)

○ (기업도약보장패키지)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(조선업·반도체, +17억원) 및 컨설팅(+7억원)을 통해 기업유형·업종별 맞춤형 채용서비스 지원

○ (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) 역량진단·경력설계·일자리추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(상담프로그램개발 등 전문성 강화 +24억원)

□ 저소득·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

- (국민취업지원제도)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원, 조기취업성공수당 강화(50만원→50~125만원) 등 맞춤형 지원 확대
- (사회보험) 저임금 근로자(국민연금·고용보험), 특고·예술인(고용보험)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(+27.8만명)
 - *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→130%으로 확대(+17.5만명)
 - 예술인·특고 지원대상 사업장은 10인미만→소사업장으로 완화(+10.3만명)
- (장애인)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장려금 인상(月30~80→35~90만원), 출퇴근비용(月 5만원) 지원대상* 및 표준사업장 설립(90→120개소) 확대
 - * (지원대상) 기존근로능력 취약 장애인(0.3만명) → 추가중위소득 50% 이하 중증장애인(1.5만명)

□ 청년·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- (청년) NEET(도약준비금 0.5만명)·대학생(도약보장패키지 3만명)·구직자(일경험 +1.0만명) 등 청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
- (고령자)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(1인당 월 10/30만원, 2년간)하는 고령자고용장려금 확대(0.9→6.1만명)

(억원)

구 분	'22년	'23안	비고
▪ 직접일자리	31,770	31,177	▪ 노인일자리 82.2만명, 자활근로 6.6만명
▪ 직업훈련	25,199	27,271	▪ 내일배움카드 1.2 → 1.4조원
▪ 고용서비스	18,989	17,615	▪ 국민취업지원제도 1.4 → 1.2조원
▪ 고용장려금	65,182	50,981	▪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.0→0.2조원, 고용유지지원금 0.6→0.2조원
▪ 창업지원	31,652	29,397	▪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2.0→1.7조원
▪ 실업소득 유지·지원	137,715	134,351	▪ 구직급여 11.5 → 11.2조원
▪ 장애인지원	8,668	9,548	▪ 장애인고용장려금 0.26→0.30조원
합 계	319,177	300,340	

- ◇ 저소득 초·중고·대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
- ◇ 첨단분야(반도체 등) 등 산업·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확대
- ◇ 취약계층(장애인 등) 중심, 평생교육·직업역량개발 기회 확대
- 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·평생교육 집중 투자 추진

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

- (유아) 안정적인 누리과정(3~5세 공통 교육·보육과정)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(+2년) 소요 반영
 - * [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] ('22) 3.83조원 → ('23안) 3.47조원
- (초·중고)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 지원하고, 소외계층 영재교육 확대(600→650명), 실감형 SW·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(31억원)
 - * [고교 무상교육] ('22) 9,094억원 → ('23안) 9,028억원
 - [영재교육 지원사업] ('22) 21억원 → ('23안) 22억원(600→650명)
 - [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] ('22) 20억원 → ('23안) 31억원
- (대학생)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범위 확대,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유지
 - * 다자녀가구 공제액 확대 등: +4.0만명('22: 9,180 → '23안: 9,998억원)
 - 한국장학재단출연: ('22) 2,014억원 → ('23안) 3,217억원
- 국립대학 승선실습 대학생의 급식단가 인상(7,150→13,000원), 피복 지급품목 확대(7개품목 추가 등) 등 복리후생 대폭 개선

② 4차 산업혁명, 지방대학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인재양성 종합 지원

-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추가 15만명 양성을 위해 정원확대(반도체특성화대학^[신규]), 단기 교육과정 신설(부트캠프^[신규]) 등 지원
 - * 주요사업: 반도체특성화대학 480억원, 반도체부트캠프 150억원 등
- 특히,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수준을 높이고*, 교육·연구·실습 기반구축 예산**도 지방대학 중심으로 중점 반영
 - * 예시: 반도체특성화대학 선정시 비수도권대학 비중 50% 지원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상향
 - ** [주요사업] ①4개권역 공동교육·실습 Hub 신규 구축(총사업비 656억원), ②국립대 반도체 기자재 구입예산 10배 이상 확대(비수도권 중심, 46→560억원) 등

○ 디지털혁신공유대학, 마이스터대 확대 등 신산업분야 고등
핵심인재 및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강화

* [디지털혁신공유대학] ('22) 890억원(8개) → ('23안) 1,443억원(13개 컨소시엄)
[부처협업형인재양성] ('22) 420억원 → ('23안) 1,053억원

* [마이스터대 지원] ('22) 5개교 101억원 → ('23안) 6개교 121억원
[신산업 특화선도형 전문대학 지원] ('22) 12개교 122억원 → ('23안) 14개교 142억원

○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핵심산업 산·학 협업
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지자체-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확대

* [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] ('22) 6개 2,440억원 → ('23안) 8개 3,040억원

③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

○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대상·기간 확대

* [장애인평생학습도시] ('22) 29억원(15개소, 1년지원) → ('23안) 76억원(53개소, 3년지원)

○ 저소득층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
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및 저소득 장애인 별도 지원

* [평생교육바우처] ('22) 141억원(3만명) → ('23안) 206억원(6만명(장애인 0.3만명 할당))

○ 지적장애인 등 특수교육용 교과서 개발*을 확대 지원하고,
장애인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완공** 지원

* [특수교육 내실화지원] ('22) 146억원 → ('23안) 206억원

** [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(공주대)] ('22) 40억원 → ('23안) 174억원

④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
교부금 개편 및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」(가칭) 신설 추진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고
▪ 유아·초중등교육	707,301	824,324	▪ 지방교육재정교부금(650,595→772,806억원) ▪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(38,290→34,700억원)
▪ 고등교육	120,894	123,285	▪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(4,359→5,512억원) ▪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(1,287→1,779억원) ▪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(2,440→3,040억원)
▪ 평생·직업교육	11,983	12,251	▪ 평생교육바우처 지원(141→206억원) ▪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(29→76억원) ▪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(531→551억원)
합 계 (교부금 제외시)	841,571 (190,975)	961,383 (188,577)	14.2% 증가 (△1.3% 감소)

- ◇ 한국문화의 지속성장·경쟁력 강화를 위한 K-콘텐츠 지원 확대, 균등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및 문화예술 창·제작 활성화
- ◇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·생활 스포츠에 대한 투자 강화
- ◇ 관광생태계 회복·도약을 위한 스마트·웰니스 관광 활성화,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·마케팅 강화

□ K-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 대응 지원

-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·이차보전 등 정책 금융* 지원을 강화하고, 콘텐츠기업 세계 진출 거점(10→15개) 확대
 - * IP펀드 등 6개 펀드에 2,200억원 신규 출자, 민간금융 3,200억원 규모 이차보전
-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, OTT 특화 기획인력 양성(45억원), IP 확보 전제 OTT 방송 제작지원(449억원), IP 후속활용 지원(100억원) 추진
- 10억부 웹툰작가 육성(10억원, 신규), K-그림책 세계화(4억원, 신규), 영화기획개발(70억원) 등 분야별 콘텐츠 맞춤형 지원 강화

□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창제작 활성화

-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림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(10→11만원), 장애예술인 함께누리* 적극 지원
 - * 장애예술인 신기술 활용 창작지원(신규 11억원), 장애예술인 전용 전시장(신규 12억원)
-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-지방 창·제작 유통사업(259억원), 문예회관 활용 방방곡곡 문화공감(178억원) 확대
- 국립예술단체의 지역순회공연* 활성화, 장애인·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** 및 관람환경 개선 지속
 - * 전국 순회 발레공연(국립발레단, 20억원), 종묘제례악 순회 공연(국립국악원, 10억원)
 - ** 장애인 관람가능 음악극·뮤지컬(국립극장, 11억원), 장애유형별 안내서비스(국립박물관, 17억원), 장애유형별 도서자료 제작(국립장애인도서관, 104억원)

□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·전문 체육 지원 강화

-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*, 노령층 특화 시설·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(3개, 6억원) 신규 추진

* (지원금액) 월 8.5→9.5만원, (인원) 8.6→10.6만명, (기간) 10→12개월

- 국가대표 선수 수당·훈련비 현실화*, '24 평창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(344억원)

* (수당) 7→8만원, (숙박비) 4→6만원

□ 코로나 19 이후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및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

-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·플랫폼을 통합한 스마트관광도시(10→13개소), 관광기업 해외지원센터(1→2개) 확대

- 국제관광재개에 따른 방한관광 선점을 위한 한국방문의 해* (100억원, 신규),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홍보·마케팅 강화

* 민관협력 항공·숙박·면세·식음 등 관광 프로모션 제공 및 각종 캠페인 개최

-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광 거점도시(5개소, 423억원), 광역관광개발사업(543억), 지역의료·웰니스 관광사업 연차별 투자 계속

□ 균형있는 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

-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및 소외분야 전수 장학생 지원 확대*, 문화재수리 재료·역사문화센터 지원 등 보존 투자 강화**

* 전승교육사 지원금(월 75→90만원) 취약종목 전수장학생(월 27.5→30만원)

** 문화재수리재료센터(209억원), 가야역사문화센터(268억원),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(74억원)

- 궁능원·왕릉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문화재 관리 중대재해 안전보건 강화*

*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(217억원, 신규), 궁중 문화축전 및 전통공연 체험(208억원), 중대재해 안전보건(11억원, 신규)

(억원)

구분	'22	'23안	비고
▪ 문화예술	41,423	39,933	·OTT방송콘텐츠(+767), 콘텐츠 수출기반조성(+105) ·통합문화이용권(+214), 공연예술창제작 유통(+49)
▪ 체육	19,303	16,118	·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(+6, 3개소, 신규) ·우수선수 양성지원(+105)
▪ 관광	14,496	12,261	·고품격 관광 활성화(+202) ·관광거점도시(+92), 광역관광개발사업(+63)
▪ 문화재	12,014	12,935	·문화재보수정비(총액)(+594) ·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(+217)
합계	90,975	85,038	△6.5%

◇ 초격차 핵심기술,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해 정부 R&D 투자 30조원 돌파

◇ R&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역량 활용 및 협업형 투자 확대

□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분야 R&D 투자 확대(3.7 → 4.5조원)

○ 반도체 등 시장 선점과 경제안보 및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초격차 전략기술*의 연구개발, 인프라,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

* ❶반도체, ❷5G·6G·양자, ❸미래모빌리티, ❹우주, ❺첨단바이오, ❻이차전지, ❼인공지능

- (반도체) 경쟁국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반도체(AI·전력 반도체, 센서 등)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

*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 ('23 신규) 140억원

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-Sensor 기술개발 ('22) 153 → ('23) 277억원

- (우주) 발사체·위성기술 고도화 추진 및 독자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주도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

* 국가위성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 ('23 신규) 114억원

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('22) 561 → ('23) 1,427억원

- (5G·6G 및 양자) 차세대 핵심기술(5G·6G, 양자기술) 개발 및 네트워크·SW 안전성 확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

*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('23 신규) 62억원

양자기술개발선도(양자센서) ('23 신규) 71억원

□ 세계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미개척 분야* 도전적 연구 지원(0.3→0.4조원)

* ❶핵융합 등 미래에너지, ❷난치병, ❸식량위기·사회재난 등 생활안전, ❹로봇·VR/AR 등 일상혁신, ❺UAM·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, ❻우주기초연구지원

○ 핵융합·난치병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 추진

※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('22) 41억원 → ('23) 58억원

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('22) 225억원 → ('23) 268억원

(혁신도전형)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('22) 40억원 → ('23) 123억원

□ 미래 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정부 중심 양적 투자가 아닌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성과 중심 전략적 R&D 투자 유도

- TIPS, 민간투자연계형 R&D 등 민간과의 연계 확대,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업 고성장 스케일업 확대
 - (민간투자연계) 민간에서 사업성을 판단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 및 민간 先투자 後정부 매칭 지원
 - *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(민간투자연계형) ('22) 308 → ('23) 612억원
 - 창업성장기술개발(TIPS) ('22) 2,157 → ('23) 2,681억
 - (민관협업투자) ①민간 제안사업, ②민관 합동 대형 R&D, ③기업 연계 실증 등 민관 협업 투자 확대
 - * 다목적실용위성개발 ('22) 137억원 → ('23) 383억원 (과기부, 방사청, 산업부)
 - (중소·중견기업 스케일업) 전략기술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기술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장 스케일업 견인
 - *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(수출지향형) ('22)361 → ('23)906억원

□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기반 강화 추진

- 반도체, 우주, 바이오 등 대학(원) 과정의 기술융합 및 고도화 연구지원 등을 통해 석·박사급 고급인재와 실무인재 확충
 - *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('22) 413억원 → ('23안) 586억원
 - *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(학석사연계CT핵심인재양성) ('22) 1,075억원 → ('23안) 1,283억원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 고
▪ 과학기술·통신 분야	96,556	99,775	· 개인기초연구(과기부)(16,283→16,367) · 다목적실용위성개발(35→375) ·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(387→419)
▪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	74,545	75,149	· 소재부품기술개발(8,410→9,376) · 창업성장기술개발(4,086→4,423)
▪ 교육 분야	25,436	26,692	·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(5,190→5,190) · 산학협력고도화지원(2,180→2,590)
▪ 보건·복지 분야	11,173	10,979	· 연구중심병원육성(529→468) · 국가신약개발사업(420→412)
▪ SOC 분야	10,794	11,009	·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(375→503) · 차세대 해빙연구선 건조사업(34→422)
▪ 기타 부문	79,266	82,970	·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(259→330) ·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(104→138)
합 계	297,770	306,574	3.0% 증가

- ◇ 주력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·부가가치 혁신
- ◇ 원전·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믹스+탄소중립 실현
- ◇ 민간중심 창업·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생태계 활력 제고
- ◇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집중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

□ 핵심전략산업·제조업 집중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

- (핵심전략산업)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-기술개발-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(1.9조원)

* (반도체) 인력 2.6만명 양성(0.45조원), 유망기술 R&D(0.39조원), 인프라사업화(0.17조원)
(자동차) 미래차 전환지원·교육(145억원), 그린카(818억원)·자율차(1,568억원) 연구개발 등
(조선) 생산인력 양성(60억원), 선박 소부재 생산 지능화(32억원) 등

- (제조업) 스마트그린산단 5개소 추가선정, 스마트공장 고도화 신규추진(+523개소) 등 제조기반구축사업 고도화(0.4조원)

□ 공급망 및 수출여건 개선을 통해 대외경제충격에 탄력적 대응

- (공급망) 수입선 다변화, 주력산업 국산화 R&D, 유턴·외투기업 지원, 공공비축 강화* 등 대외 공급망충격 대응역량 강화(3.2조원)

* (석유·석탄) 석유비축사업출자 673억원, 석탄비축자산구입 21억원
(희소광물 등) 회전자금전출금 500억원, 광해공단비축출자 372억원
(농수산물) 농산물 비축지원 2,318억원, 수산물 비축지원 1,750억원

- (수출) 플랫폼고도화·전문인력양성 등 디지털무역 인프라 강화 및 물류바우처·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물류애로 해소(0.1조원)

□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

- (원전) 원전 기업역량강화, 맞춤형 수출지원, 기술개발, 인프라 투자 등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 및 국제경쟁력 복원(0.7조원)

- (수소) 청정수소(그린·블루) 생산으로의 전환 추진, 상용차(버스 등)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 수소경제 소주기 지원(0.2조원)

- 창업·벤처기업 지원방향을 정부 → 민간중심으로 전환
 - (창업촉진) 대학자율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중심대학 확대(6→9개소),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(1→3개소 이상) 등(0.1조원)
 - (벤처지원)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R&D·사업화자금 등 지원 (1,582개사), 글로벌·대기업 협업 지원(355개사) 등(0.5조원)
-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구조화
 - (자금) 유망기업에 대한 혁신투자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 활용 확대(융자규모 1.6→1.7조원)
 - (기술개발) 중소기업 기술혁신·상용화를 위해 성장단계별·협업종류별 맞춤형 R&D지원 확대(0.7조원)
 - (물류) 공동활용 물류인프라 신설, 중소기업 전용 물류바우처 지원 등 수출·물류지원 강화(0.2조원)
-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기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
 - (온라인·스마트화) 온라인 판로지원 6→7만개, 미래형 스마트 점포 600개 신규지원, 스마트공방 1,000→1,500개(0.2조원)
 - (기업가형소상공인) 유망소상공인 팀빌딩·사업화·투융자 종합 지원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(0.1조원)
 - (재기) 위기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2.9→3.4만명,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물량 3.5→4조원으로 확대(0.4조원)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고
▪ 무역 및 투자유치	9,096	9,083	KOTRA지원 3,008, 수출지원기반활용 1,197억원
▪ 창업 및 벤처	42,397	39,751	창업·재도전융자 26,330, 민관협력창업지원 1,865억원
▪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	141,851	91,432	중소기업융자 17,425, 소상공인융자 30,000억원
▪ 에너지 및 자원개발	50,695	48,201	신재생에너지보급 금융지원 6,643, 에너지바우처 1,824억원
▪ 산업혁신지원	58,334	57,834	소재부품기술개발 9,376, 지역투자촉진 1,998억원
▪ 지식재산일반	3,678	3,568	특허심사지원 666, 지식재산활용지원 278억원
▪ 산업·중소기업 일반	7,141	7,169	인건비 5,667, 기본경비 1,000억원
합 계	313,292	257,037	전년대비 △56,232(△18.0%)

- ◇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하여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화
- ◇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, 기술혁신기반,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

□ (재구조화) 그동안의 지출확대*를 감안하여 투자적정화

* SOC 예산(조원) ('18) 19.0 → ('19) 19.8 → ('20) 23.2 → ('21) 26.5 → ('22) 28.0

- 계속사업은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 완공에 지장 없도록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
- SOC 지방이양 계획을 이행*하고, 기존 사업들을 성과중심 체계로 개편**하여 내실화

*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 2,156 → 0억원, 주차환경개선 2,418 → 0억원

** (예시) 도시재생사업 : 사업유형 통폐합(5→2개), 신규 사업지 조정(72→20개) 등 8,930 → 5,960억원

□ (교통혁신) 권역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망 확충 및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

- (수도권 GTX) 기존 노선(A·B·C)은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,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11억원)

* (GTX-A, 재정·민자) 4,609→5,059억원(공사비·건설보조금)

(GTX-B, 재정·민자) 803→384억원(설계비 등) (GTX-C) 1,030→1,276억원(보상비 등)

- (지역 교통인프라) 신규 고속도로·국도* 확충, 비수도권 광역 철도** 등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,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

* 고속도로 4건, 국도·혼잡도로 2건 신규착공 ** 차량구입비 지원 보조율 확대(50→70%)

- (저렴·안전한 대중교통) 알뜰카드 확대*로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 및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**로 입석 방지

* (이용인원) 44 → 64만명 / (지원금액) 1회당 250원 → 350~500원

** 1일 153회 투입 → 1일 203회 투입

- (교통약자 이동권)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·콜택시 확대 및 운영비 등 정부지원 강화*

* (저상버스 도입) 2,248대, 986억원 → 4,299대, 1,895억원

(장애인콜택시) (도입) 417대, 94억원 → 456대, 101억원 / (운영) 국비지원 신설 238억원

□ (미래혁신 투자)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

- (디지털국토) 고정밀 전자지도(1:1000) 제작 확대,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(국도) 등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 추진

* 국가기본도 제작(1:1000) 100 → 566억원, 국도 도로대장 디지털화 20억원(신규)

- (모빌리티) UAM·PM(개인형 이동수단) 등 미래교통 투자 강화

- UAM(도심항공교통) 상용화('25년~)를 뒷받침하기 위한 2단계(도심지) 실증실험시설 구축(87억원, 신규)

-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특화도시 조성(3개도시, 27억원), 미래형 환승센터(MaaS Station*) 구축

* 기존환승센터(철도·버스 연계)에 새로운 이동수단(전기·수소차, UAM, 공유 모빌리티 등)을 연결하기 위한 충전소·거치공간 등 확보(2개소, 10억원)

- (스마트항공)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(KASS*) 제공 개시('23~)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 지원(150억원, 신규)

* GPS 오차범위를 축소(33→1.6m)하여 항공기 결항지연 방지, 유류비 절감 등 편익 제고

□ (안전투자)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

- (도로) 교량·터널 보수(4,501 → 4,957억원), 노후도로 포장정비(2,519 → 2,760억원) 확대로 도로이용 안전 제고

- (철도) 탈선 예방을 위한 선로개량 확대 및 첨단장비 투입,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근로자 작업안전 제고

* 고속·일반철도간 연결선 보강(244억원) 및 첨단장비 도입(자동탐핑기 등 5종, 142억원)

** 보도·안전난간·사다리 등 투자 확대(55→164억원)

- (수자원) 기후변화·집중호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제방정비 투자 대폭 확대(4,100 → 5,010억원)

(억원)

구 분	'22년	'23안	비고
○도로	85,478	77,828	· 건설(5.8 → 5.0조) · 관리(2.7 → 2.7조)
○철도, 도시철도	85,756	77,644	· 건설(5.4 → 4.3조) · 안전 등(3.1 → 3.5조)
○해운·항만	20,320	18,940	· 해운(0.4 → 0.4조) · 항만(1.6 → 1.5조)
○수자원	16,055	16,918	· 하천관리(0.7 → 0.8조)
○지역 및 도시	30,439	22,760	· 도시재생(0.9 → 0.6조)
○물류, 항공, 산단 등	41,635	38,656	· 산단진입도로(0.3→0.2조), 항공·공항(0.4→0.3조)
합 계	279,683	251,213	△28,470억(△10.2%)

- ◇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
- ◇ 직불금 등 농어가 소득안정 강화 및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
- ◇ 스마트 농어업 확산,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미래성장산업화
- ◇ 산림재해 예방·피해복구 및 국민체감 산림휴양자원 조성

□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

-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(+0.1조원), 비료·사료 구매자금(+0.1조원), 계란공판장 운송비(+56억원) 등 물가부담 경감
 - * 농축수산물 할인쿠폰: (‘22년) 590 → (‘23년) 1,690억원 (1인당 1만원)
 - **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: (‘22년) 3,550 → (‘23년) 10,000억원 (+6,450억원)
- 탄력적 수급관리를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 2배 확대(70→140억원), 밀(1.4→2.0만톤)과 주요 수산물(1.3→3.2만톤) 비축물량을 확대하고,
 - 노지채소·과수·과채 등 계약수매 용자 규모 확대(+168억원),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(생산량의 20→23%, +100억원)
- 가루쌀 산업화*(107억원^{산궤}), 밀·콩 생산단지 조성 및 신기술 보급**, 전략작물직불제 도입(밀-콩 이모작 250만원/ha) 등 핵심작물 생산 촉진
 - *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 15개소, 가루쌀 사용 제분업체 시설·장비 지원 8개소
 - ** 밀·콩 생산단지 시설·장비 지원 170개소(+27억원), 밀·콩 시범 재배·가공단지(6개소)
 -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인수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(13억원^{산궤}), 농업기업 해외진출 확대(12→15개) 등 수입선 다변화

□ 농어가 소득안정 강화 및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

-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(+56만명, +0.3조원), 소규모 어가·어선원 직불금 신설(+512억원) 등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
 - * 기본형공익직불: (‘22년) 22,805억원 → (‘23년) 25,805억원(+3,000억원)
 - * 수산공익직불제: (‘22년) 559억원 → (‘23년) 933억원(+375억원)
-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확대(45→85개, +415억원), 민간역량을 활용한 어촌신활력 사업 신규 착수(60개소, 444억원^{산궤})

- 고령 농어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·연금 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

* 농·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: ('22년) 3,740억원 → ('23년) 4,151억원(+412억원)
 * 농지연금: ('22년) 2,106억원 → ('23년) 2,282억원(+177억원)

□ 스마트 농어업,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성장 산업화

- 농업용 로봇 3종 실증(과수·논·밭, 30억원^{신규}), 임대형·노지 스마트팜 및 수산기자재 클러스터(14억원^{신규}) 등을 조성하고,

* 임대형 스마트팜: ('22년) 410억원 → ('23년) 615억원(+205억원, +3개소)
 * 노지 스마트농업: ('22년) 102억원 → ('23년) 57억원(일반 2개소, 유기농 1개소)

-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(15개소), 저온·친환경 위판장 도입(5개소), 도매 온라인거래(+49억원) 등 생산·유통·소비 순과정 디지털 전환

*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: ('22년) 318억원 → ('23년) 358억원(+40억원)
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: ('22년) 23억원 → ('23년) 96억원(+73억원)

- 청년의 농어촌 유입·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*을 확대하고 (2→4천명), 스마트팜·주택·농지 패키지** 지원(+0.1조원)

*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: ('22년) 389억원 → ('23년) 541억원(+152억원)
 ** 先임대-後매도 방식 농지 장기임대(81억원^{신규}), 농업스타트업단지 공급(6ha^{신규}), 비축농지활용 스마트팜 조성(6ha^{신규}), 스마트팜 인근 임대주택단지 조성(30호, 1→4개소)

□ 자연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

- 산림헬기(대형 +1기), 고성능산불진화차량(+9대) 등 장비보강 및 임도(+264억원), 친환경 벌채(+13억원) 등 재해대응 능력 강화

- 동서트레일 조성(+15억원),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(+40억원), 사회적약자 산림편의시설 확충(+9억원)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 고
▪ 농업·농촌	172,466	176,617	· 공익증진직불 26,868(+3,258), 비축지원 6,866(+1,245)
▪ 수산·어촌	28,428	29,365	· 수산직불제 933(+375), 어촌신활력증진 444(신규)
▪ 임업·산촌	27,599	27,576	· 임도시설 1,646(+264), 산림헬기 도입·운영 1,108(+334)
▪ 식품업	8,329	8,843	·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4,584(+556)
합 계	236,822	242,402	2.4% 증가

- ◇ 탄소중립을 新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는 녹색경제 전환 지원
- ◇ 과학적·실용적 NDC 달성을 위해 수송, 폐기물 등 부문 중점 투자
- ◇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·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, 노후화된 국립공원 시설을 전면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

① 탄소중립을 新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는 녹색경제 전환 지원

- (공정개선)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, 목표관리제 중소·중견 기업, 탄소 多배출업종 중소기업 등 맞춤형 공정혁신 지원

* (배출권 할당업체)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99→140개사 등(1,221→1,617억원),
(목표관리제 / 탄소 多배출업종) 스마트 생태공장 60→90개사 (606→909억원)

- (녹색금융) 대규모 투자(녹색채권, 이차보전), 중소·벤처기업(직접 융자, 펀드 등) 등 기업 규모에 맞춘 금융지원

* (대규모 투자) 녹색채권 3조 8,722억원(97억원), 녹색금융 이차보전 3.52조원(253억원) 등
(중소·벤처)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,700억원(2,789억원), 환경산업펀드 900억원(450억원) 등

- (R&D)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(104→138억원), 온실가스 공간정보기반 구축^{신규}(60억원) 등 탄소중립 R&D 지원

② 과학적·실용적 2030 NDC(온실가스 감축 목표) 달성을 위해 수송·폐기물 등 감축효과가 큰 부문 중점 투자(4.6→5.1조원)

- (수송) 전기차·수소 상용차*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 (누적 48→77만대)하고, 충전인프라(누적 16.0→22.2만대) 확충(2.8→3.3조원)

*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인상 : (시내버스) 1.5→2.1억원, (광역버스) 2.0→2.6억원

※ 연료전지 교체지원(신규) : 5년/50만km까지 1회 → 9년/90만km까지 3회 교체도 신규 지원

구 분	'22년	'23년	전년대비
전기차(누적)	44.6만대	71.9만대	+27.3만대
수소차(누적)	3.7만대	5.4만대	+1.7만대
전기차 충전기(누적)	16만기	22.2만기	+6.2만기
수소차 충전소(누적)	250기	300기	+50기

- (폐기물)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4→6개소(누적),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* 4→8개소(누적) 등 순환경제 기반 조성(0.30→0.32조원)

* 음식물쓰레기·분뇨·하수슬러지 등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

- (국민생활) 다회용기,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·수도·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(10→40만명)

*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및 탄소포인트제(151→240억원)

③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·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, 노후화된 국립공원 시설을 전면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

- (물환경)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, 하수처리장 등의 노후 정비 및 산·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 대폭 확대(13,591→16,438억원)

- 특히, 강남역, 광화문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2개소(총사업비 6,000억원) 지원(+55억원)

※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(총사업비 3,000억원)도 지원(+30억원)

-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유충 유출 차단시설 확충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^산(227억원)

- (대기) 대기 정체 발생일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,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,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등 지원

* (조기폐차)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00만원 신규 지원(9만대, +1,800억원)
(조기예보) 고농도 미세먼지 조기 예보 실시(12시간 전 → 2일 전, +23.5억원)

- (국립공원) '27년까지 노후·낙후된 국립공원 필수 편의시설*을 전면 재건축·보강하는 '에코 리모델링' 추진^산(481억원)

* 대상시설 및 계획물량(~'27년, 개소) : (화장실)185, (야영장)24, (주차장)31, (안내소)17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고
▪ 물환경	43,388	42,932	- 하수처리장 설치(4,964→7,418억원)
▪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	13,712	14,491	-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(2,114→2,789억원) - 폐기물처리시설 확충(1,350→1,468억원)
▪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	45,006	48,200	- 무공해차 보급사업 (24,078→27,402억원) -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(1,221→1,617억원)
▪ 자연환경	9,058	10,141	-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(2,257→2,864억원)
▪ 환경일반	4,897	5,015	-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(520→525억원)
▪ 해양환경	3,304	3,296	- 갯벌생태계 복원사업(128→227억원)
합 계	119,365	124,075	3.9% 증가

- ◇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 및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
 ◇ 병 봉급 인상, 의식주 등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장병 사기진작

-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,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 전략적 육성
- 장사정포 요격체계(189→769억원),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(210→1,292억원) 등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 확충(4.8→5.3조원)
 - 무인·우주 등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 도입, 국방 R&D 내 핵심·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대
 - * 정찰용 무인항공기(신규, 1,262억원),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(94→146억원)
 - 국방 신산업(우주·AI·사이버 등)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선정하여 풀패키지 지원 및 수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
 - * 방산혁신기업 지원(신규, 310억원), 무기체계 개조개발(582→757억원)
-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 봉급 및 의식주에 대한 투자 확대
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(병장 기준, 67.6→100만원, 전역자 월 14.1→30만원)
 - * 병 인건비(23,050→28,259억원), 사회진출지원금(2,190→6,610억원)
 - 상용이불(66.5만개 즉시보급), 방탄헬멧(+2,787개, '23년 보급완료), 전투조끼(4,842→30,359개, '23년 보급완료) 등 개인전투장비 신속 보급
 - * 상용이불(신규, +213억원), 방탄헬멧(30→40억원), 전투조끼(4.4→27.8억원)
 -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병 급식비 인상(1일 1.1→1.3만원) 및 더 좋은 병영식당 사업 확대(3→297개),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(3,188→3,305명)
 - * 기본급식(15,538→17,170억원), 더 좋은 병영식당(신규, +304억원)
 - 국민평형(32평형) 군 관사* (신규 644세대) 및 1인 1실 간부숙소 지속 보급(신규 3,331실), 2~4인실 병영생활관 신축 등 주거지원 강화
 - * 32평형 관사 : '22년 0세대(총 308세대 중 0%) → '23년 504세대(총 644세대 중 78%)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 고
▪ 방위력 개선	166,917	170,179	· 한국형 3축체계(48,036→52,549억원, +9.4%) · 핵심·도전 국방기술개발(10,332→13,959억원, +35.1%) · 방위산업 육성 지원(1,246→1,759억원, +41.1%)
▪ 전력운영	379,195	401,089	· 병 봉급 인상(병장 기준 67.6→100만원, +47.9%) · 사회진출지원금 (월 14.1→30만원, +112.8%) · 급식단가 인상 (1.1 → 1.3만원, +18.2%)
합 계	546,112	571,268	4.6% 증가

- ◇ ODA 대폭 확대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능동적 외교
 ◇ 대북 인도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지원 강화

-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
 (신규6억원), 신안보포럼(+16억원) 등 능동적 외교 지원
- 소규모 무상원조(+665억원, 97개국), 주요인사 방한 초청(+20억원),
 중소국가 대상 고위급 협력(신규11억원) 추진을 통한 외교적 외연 확대
 - 한국학 기반확대(+23억원),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(신규42억원),
 재외국민 보호 역량강화(+10억원) 등 외교활동 인프라 구축
-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
 위한 ODA 대폭 확대 추진(3.9→4.5조, +14.2%)
- * 국정과제 99 :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
- 러-우크라이나 전쟁,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응을
 위한 해외 긴급 구호(1,236→1,454억원, +218억원) 지원 확대
 - *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-A 1억불 기여 정상 추진('23-'25년 3억불)
 - **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(+0.1조원)
 - 글로벌 보건·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 확대
 - *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-A 1억불 기여 정상 추진('23-'25년 3억불)
 - **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(+0.1조원)
 -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중소·중견기업 수출 지원을
 위한 대개도국 차관(EDCF) 규모 확대(1.3→1.5조원)
-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북한
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 강화
- 코로나 19 관련 인도적 지원(신규488억원) 및 북한 인권 개선을
 위한 국제협력·교육 등 강화(신규15억원)
 -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인상(8→9백만원)으로 초기 지원 강화(+5억원)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 고
· 외교 · 통상 부문	44,180	49,020	· 대 개도국 차관(13,334→15,030)
· 통일 부문	15,363	14,860	· 민생협력지원(5,131→6,259)
합 계	59,543	63,880	7.3% 증가

◇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
 ◇ 재난예방 인프라투자 강화 및 ICT기술 활용 재난대응 고도화

- 아동·여성·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**흉악·신종범죄**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,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
- 스토킹, 보이스피싱,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척·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및 치안 인프라 확충
 - *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확충(9.3 → 21.9억원), DNA 감정 장비 확충(6.7억원, 신규) 등
 -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* 강화(+32억원)
 - * 전자장치 스트랩 강화 및 CCTV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
 - 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전담변호(35→43명), 진술 분석관(16→24명) 확대 및 영상증인신문소 신설(25개소)(+100억원)
- 대형재난에 대응, 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
- 기후변화로 대형화·장기화되는 재난에 대응, 효과성 높은 예방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며, 재난대비 사전적 대응역량 강화 추진
 - * 재해위험지역 정비물량(691개소 → 740개소), 우수저류시설 설치(신규 8개소)
 - AI·빅데이터, IoT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화하는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
 - *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^{신규}(90개소, 3년간 총 270개소)

(억원)

구분	'22	'23안	비 고
· 법원 및 헌재	21,763	22,333	· 국선변호 지원(387→427), 조정제도 지원(122→128), 사건기록전자화(7→16)
· 법무및검찰	43,848	44,329	· 전자감독(274→306),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(+47, 신규), 영상증인신문소(+13, 신규), 피해자국선변호(91→97)
· 경찰	126,461	127,723	· 경량 호신용 조끼 도입(+124, 신규), 중형방패, 접이식방패 도입(+9, 신규), 지역경찰 등 권총 교체(1.5→37)
· 해경	17,107	18,356	· 함정건조(1,373→1,742), 항공기도입(573→654)
· 재난관리	14,005	15,839	· 재해위험지역 정비(6,178→6,820), 풍수해보험(254→364) ·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(+68, 신규)
합계	223,184	228,580	24% 증가

- ◇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, 포용적 금융 등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
 ◇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 등 지방소멸 대응 및 활력 제고

□ 민관협력 기반 혁신적으로 일하는 「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」

-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*,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창의 촉진

*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 허브 확대 구축(금융→교육, 복지, 의료, 통신)

-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*하고, 데이터 통합·분석 확대 등 정부혁신 가속화

* 국민체감선도프로젝트 :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, AI기반 기상예보 생산 등

□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 등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

* 청년도약계좌: ('23) 3,528억원(순증) / 소상공인 채무조정: ('23) 2,800억원(순증)

□ 지방소멸 대응·접경지역 지원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

-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(주거·통신 등)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출연,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

*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('22) 7,500 → ('23) 10,000억원(+33.3%)

** 접경지역 지원 :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, 평화빌리지 조성 등 9개사업 499억원

(억원)

구 분	'22	'23안	비고
▪ 정부자원관리	13,887	11,124	·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(60→136) ·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(787→895)
▪ 재정·금융	237,996	281,877	· 청년희망적금(476→3,602), 청년도약계좌(신규, 3,528) ·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(2,800) · 국고채 이자상환(156,660→192,071)
▪ 지방행정·재정지원 (교부세 제외시)	673,219 (22,659)	771,974 (19,091)	· 지방교부세(650,560→752,883) ·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(7,500→10,000)
▪ 입법 및 선거관리	15,870	11,404	· 선거장비및물품관리(25→361) · 입법활동지원(444→538)
▪ 일반행정	33,378	34,006	· 제주4·3피해보상(보상금등)(1,810→1,936) · 원자재및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(10→92)
▪ 국정운영	6,587	6,750	· 청년정책총괄조정및지원(41→92) ·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(5,457→5,544)
합 계 (교부세, 국고채이자 제외)	980,939 (173,718)	1,117,135 (172,181)	13.9% 증가 (교부세 등 제외시 △0.9%)